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전망

2022년~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NABO Medium-Term Fiscal Projection:
2022~203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총괄 |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이동훈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오명희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추계 | 윤주철 (작성 총괄)
박정환 (국세수입 작성 총괄)
윤주철 신헌태 정재호
문지은 김효진 김우림
임슬기 이윤경 박선아
이미연 여은구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문석휘
박성은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고은비

경제전망 |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박승호 박선우 유근식

지원 | 박은주 유다은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역할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 수요에 대응한 의무지출의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fiscal rule)은 재정운용 목표를 수치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보다 예측가능한 제약을 두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9월 2일 “건전재정으로의 재정운용 기조 전환”을 목표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총지출은 639.0조원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때 총수입은 2.8% 증가한 규모이고, 총지출은 6.0%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23~2026년 동안 2%대를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에 52.2%로 계획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전망 결과, 정부의 계획과 유사한 국가재정의 흐름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 감축 계획 등이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총량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일러두기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경상GDP를 의미함
2. 각 표에서 “-”는 “0”을 포함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수를 의미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3.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차 례

요 약 / vii

I.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 1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1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2
가. 인구변수	2
나. 거시경제변수	3
다. 전망 방법	5

II.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 7

1. 개 관	7
2. 총수입 전망	8
가. 국세수입	8
나. 국세외수입	12
3. 총지출 전망	19
가. 의무지출	19
나. 재량지출	35
4. 재정수지 전망	36
5. 국가채무 전망	42

III.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45

1. 개 요	45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46
가. 개 관	46
나. 총수입	48
다. 총지출	52

라. 재정수지	60
마. 국가채무	63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64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64
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65
다. 재정준칙의 준수가능성 분석	70

IV. 요약 및 결론 / 77

표 차례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3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4
[표 3]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7
[표 4]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9
[표 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10
[표 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11
[표 7]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11
[표 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세목	12
[표 9]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13
[표 1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15
[표 11] 중기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16
[표 1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수입	17
[표 13] 중기재정전망: 연금수입	17
[표 1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국세외수입	18
[표 15]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19
[표 1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21
[표 17]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22
[표 1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24
[표 19]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25
[표 2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26
[표 21]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27
[표 2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28
[표 23]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29
[표 2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30
[표 25]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31

[표 2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33
[표 27]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34
[표 28]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34
[표 2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35
[표 30]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36
[표 31]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37
[표 3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42
[표 33]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43
[표 34]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45
[표 35]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46
[표 36] 기준전망: 재정총량표	47
[표 3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48
[표 3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49
[표 3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49
[표 40]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50
[표 41]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51
[표 4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외수입	51
[표 43] 주요 정책 변화: 국세외수입	52
[표 44]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53
[표 45]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54
[표 46]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54
[표 47]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56
[표 48] 주요 정책 변화: 기타 복지지출	58
[표 4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59
[표 50]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정수지	61
[표 51]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63
[표 5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65
[표 5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66

[표 5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67
[표 5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수입	68
[표 5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의무지출	70
[표 5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	71
[표 58]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72
[표 5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73
[표 60] SOC 분야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74
[표 61]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세외수입	74
[표 62] 국세외수입(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제외) 추이	75

그림 차례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6
[그림 2] 관리재정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37
[그림 3]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44
[그림 4]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비율	60
[그림 5]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62
[그림 6]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64
[그림 7]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72

요 약

I.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예산안 등”)에 반영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에 대해 전망
 -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을 10년 기간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 방향 분석
 - 또한,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효과 추정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중 2022~2031년 추계치(중위 가정) 활용
 - 총 인구는 2022년 5,163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1년 5,114만명으로 추계
 -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감소하나, 202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902만명(총 인구 수 대비 17.5%)에서 2031년 1,349만명(26.4%)으로 증가
 -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총 인구 수 대비 20.6%가 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총 인구 수(만명)	5,163	5,156	5,150	5,145	5,140	5,135	5,130	5,125	5,120	5,114
총 인구 증가율(%)	-0.23	-0.14	-0.11	-0.10	-0.10	-0.10	-0.09	-0.10	-0.10	-0.11
출생아 수(만명)	25	23	23	25	26	27	29	30	31	31
합계출산율(명)	0.77	0.73	0.70	0.74	0.78	0.83	0.87	0.91	0.96	1.00
0~5세 인구 수(만명)	187	172	160	152	147	146	148	152	159	166
0~5세 인구 비중(%)	3.6	3.3	3.1	2.9	2.9	2.9	2.9	3.0	3.1	3.2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902	950	1,001	1,059	1,120	1,167	1,220	1,260	1,306	1,349
65세 이상 인구 비중(%)	17.5	18.4	19.4	20.6	21.8	22.7	23.8	24.6	25.5	26.4
사망자 수(만명)	32	33	34	35	37	38	39	40	41	42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2021.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시경제변수

□ 경제변수는 NABO의 2022~2031년 거시경제 전망 활용

- 경상GDP 성장률은 2022년 4.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1년에 3.5% 전망
- 취업자 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3~2027년 동안 0.3~0.4% 수준, 2029년 이후 0.1% 수준으로 예상
- 명목임금상승률은 2022년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4.9%로 상승한 이후 2023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31년 3.1%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5.2%, 2023년 이후 원/달러 환율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화, 소비수요 둔화 등으로 점차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인 2.0% 수준 유지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2~2023년 3.0%, 2024년 이후 실질GDP 성장률 하락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으로 2.6% 수준 유지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평균
실질GDP 성장률	2.5	2.1	2.3	2.3	2.1	2.1	2.0	1.9	1.8	1.8	2.1
경상GDP 성장률	4.7	4.6	4.3	4.1	3.9	3.9	3.7	3.6	3.5	3.5	4.0
실업률	3.0	3.4	3.7	3.7	3.7	3.7	3.7	3.7	3.7	3.7	3.6
취업자 수 증가율	2.9	0.3	0.4	0.4	0.4	0.3	0.2	0.1	0.1	0.1	0.5
명목임금상승률	4.9	3.9	3.9	3.6	3.3	3.3	3.2	3.1	3.1	3.1	3.5
소비자물가상승률	5.2	3.3	2.7	2.4	2.1	2.0	2.0	2.0	2.0	2.0	2.6
국고채금리(3년 만기)	3.0	3.0	2.8	2.6	2.6	2.6	2.6	2.6	2.6	2.6	2.7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2.2	2.5	2.0	1.8	1.8	1.8	1.7	1.7	1.7	1.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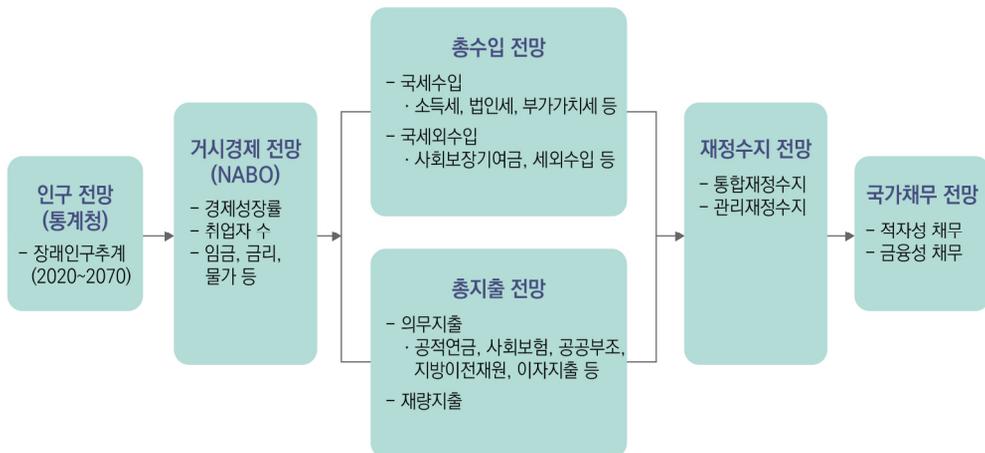
주: 평균은 2022~2031년 단순 평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전망 방법

- NABO 중기재정전망은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항목별 전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경상가격으로 전망하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전망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1. 개 관

-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 전망
 -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에서 2031년 857.6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
 -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에서 2031년 907.6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
 -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5.4%에서 2031년 △2.5%로 전망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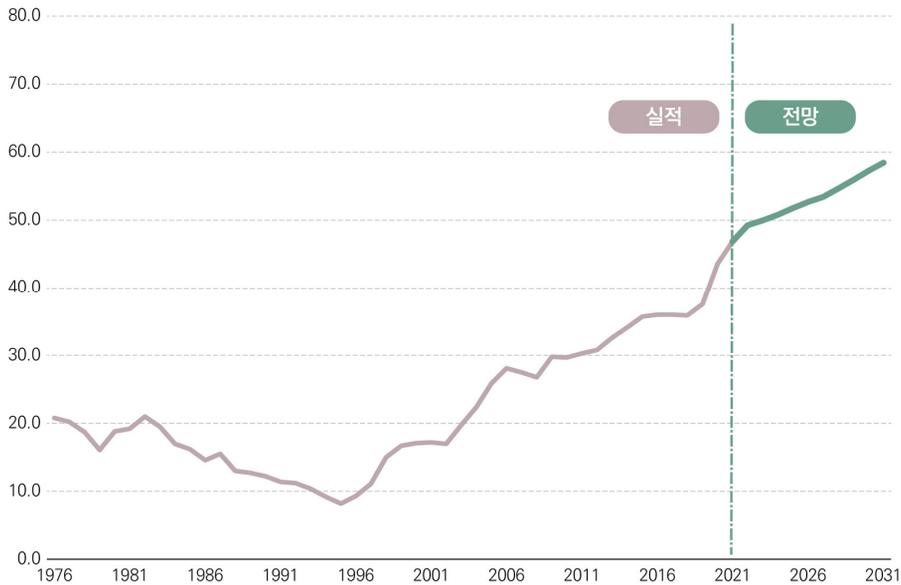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23.2	622.6	647.7	673.9	703.2	732.0	762.0	794.0	823.4	857.6	3.6
(GDP 대비 비율)	(28.7)	(27.4)	(27.4)	(27.4)	(27.5)	(27.5)	(27.6)	(27.8)	(27.8)	(28.0)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474.0	496.3	519.0	542.6	567.3	4.1
(전년 대비 증가율)	(14.8)	(1.2)	(3.4)	(4.6)	(5.0)	(4.5)	(4.7)	(4.6)	(4.5)	(4.6)	
국세외수입	228.3	223.1	234.5	241.5	249.4	258.0	265.7	274.9	280.9	290.3	2.7
(전년 대비 증가율)	(0.9)	(-2.3)	(5.1)	(3.0)	(3.2)	(3.4)	(3.0)	(3.5)	(2.2)	(3.3)	
총지출	691.8	636.6	664.8	692.0	721.1	756.4	791.9	829.5	867.2	907.6	3.1
(GDP 대비 비율)	(31.9)	(28.1)	(28.1)	(28.1)	(28.2)	(28.4)	(28.7)	(29.0)	(29.3)	(29.7)	
의무지출	342.0	339.3	356.8	375.3	397.5	419.4	441.6	465.7	489.8	516.0	4.7
(전년 대비 증가율)	(22.4)	(-0.8)	(5.2)	(5.2)	(5.9)	(5.5)	(5.3)	(5.5)	(5.2)	(5.4)	
재량지출	349.8	297.3	307.9	316.7	323.6	337.0	350.3	363.8	377.4	391.6	1.3
(전년 대비 증가율)	(9.7)	(-15.0)	(3.6)	(2.8)	(2.2)	(4.2)	(4.0)	(3.8)	(3.7)	(3.7)	
통합재정수지	-68.6	-14.0	-17.1	-18.1	-17.9	-24.4	-29.9	-35.5	-43.8	-50.0	
(GDP 대비 비율)	(-3.2)	(-0.6)	(-0.7)	(-0.7)	(-0.7)	(-0.9)	(-1.1)	(-1.2)	(-1.5)	(-1.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5	44.2	42.8	41.7	39.9	38.2	37.5	34.7	31.2	26.8	
(GDP 대비 비율)	(2.3)	(1.9)	(1.8)	(1.7)	(1.6)	(1.4)	(1.4)	(1.2)	(1.1)	(0.9)	
관리재정수지	-118.1	-58.2	-59.8	-59.8	-57.8	-62.6	-67.3	-70.3	-75.0	-76.8	
(GDP 대비 비율)	(-5.4)	(-2.6)	(-2.5)	(-2.4)	(-2.3)	(-2.4)	(-2.4)	(-2.5)	(-2.5)	(-2.5)	
국가채무	1,068.8	1,134.8	1,202.4	1,275.5	1,348.8	1,420.9	1,507.7	1,597.6	1,692.3	1,789.6	5.9
(GDP 대비 비율)	(49.3)	(50.0)	(50.8)	(51.8)	(52.7)	(53.4)	(54.7)	(55.9)	(57.2)	(5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 총수입 전망

-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57.6조원(28.0%)으로 연평균 3.6% 증가 전망
-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추정된 결과, 국세수입은 2022년 394.9조원(GDP 대비 18.2%)에서 2031년 567.3조원(18.5%)으로 연평균 4.1% 증가 전망
 -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등
 - (법인세) 세율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등
 - (기타 세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 소득세는 2022년 129.5조원에서 2031년 224.1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
- 법인세는 2022년 102.3조원에서 2031년 132.4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 부가가치세는 2022년 80.1조원에서 2031년 114.8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
- 기타 세목은 2022년 83.0조원에서 2031년 96.0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

□ (국세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추정된 결과, 국세외수입은 2022년 228.3조원(GDP 대비 10.5%)에서 2031년 290.3조원(9.5%)으로 연평균 2.7% 증가 전망

- 주요 정책 변화
 - － 국유재산 매각 계획 확대(관유물매각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경상이전수입) 등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22년 82.0조원에서 2031년 109.9조원으로 연평균 3.3% 증가
- 연금수입(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022년 16.6조원에서 2031년 31.1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국세외수입은 2022년 129.7조원에서 2031년 149.3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23.2	622.6	647.7	673.9	703.2	732.0	762.0	794.0	823.4	857.6	3.6
(GDP 대비 비율)	(28.7)	(27.4)	(27.4)	(27.4)	(27.5)	(27.5)	(27.6)	(27.8)	(27.8)	(28.0)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474.0	496.3	519.0	542.6	567.3	4.1
(GDP 대비 비율)	(18.2)	(17.6)	(17.5)	(17.6)	(17.7)	(17.8)	(18.0)	(18.2)	(18.3)	(18.5)	
소득세	129.5	132.4	141.1	152.9	164.5	175.8	187.1	198.7	211.0	224.1	6.3
법인세	102.3	106.0	104.5	107.0	110.9	115.0	119.3	123.6	128.0	132.4	2.9
부가가치세	80.1	82.7	87.3	91.1	94.7	98.6	102.5	106.5	110.5	114.8	4.1
기타	83.0	78.4	80.3	81.4	83.7	84.5	87.4	90.2	93.0	96.0	1.6
국세외수입	228.3	223.1	234.5	241.5	249.4	258.0	265.7	274.9	280.9	290.3	2.7
(GDP 대비 비율)	(10.5)	(9.8)	(9.9)	(9.8)	(9.7)	(9.7)	(9.6)	(9.6)	(9.5)	(9.5)	
사회보장기여금	82.0	86.3	89.7	93.0	96.0	98.7	101.8	104.5	107.3	109.9	3.3
연금수입	16.6	18.5	19.3	21.1	22.2	24.1	26.1	28.1	29.0	31.1	7.2
기타	129.7	118.4	125.5	127.5	131.1	135.1	137.8	142.3	144.6	149.3	1.6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총지출 전망

□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07.6조원 (29.7%)으로 연평균 3.1% 증가 전망

□ (의무지출)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의무지출은 2022년 342.0조원(GDP 대비 15.8%)에서 2031년 516.0조원(16.9%)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주요 정책 변화

- 건강보험제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의 재산기준 완화(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연금액 인상(기초연금), 부모급여 신설(영유아보육료), 위탁병원 이용자의 기준 연령 폐지(보훈), 지원근거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등

-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2년 143.1조원에서 2031년 253.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
- 지방이전재원은 2022년 166.7조원에서 2031년 219.3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
- 이자지출은 2022년 18.8조원에서 2031년 34.1조원으로 연평균 6.9% 증가
- 기타 의무지출은 2022년 13.4조원에서 2031년 8.8조원으로 연평균 4.6% 감소

□ (재량지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재량지출은 2022년 349.8조원(GDP 대비 16.1%)에서 2031년 391.6조원(12.8%)으로 연평균 1.3% 증가 전망

- (2022~2026년)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가정
- (2027~2031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31년에 장기수립 수준에 이르도록 증가
 - 장기수립 수준은 2012~2023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으로 가정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691.8	636.6	664.8	692.0	721.1	756.4	791.9	829.5	867.2	907.6	3.1
(GDP 대비 비율)	(31.9)	(28.1)	(28.1)	(28.1)	(28.2)	(28.4)	(28.7)	(29.0)	(29.3)	(29.7)	
의무지출	342.0	339.3	356.8	375.3	397.5	419.4	441.6	465.7	489.8	516.0	4.7
(GDP 대비 비율)	(15.8)	(15.0)	(15.1)	(15.2)	(15.5)	(15.8)	(16.0)	(16.3)	(16.6)	(16.9)	
복지 분야	143.1	153.7	164.7	177.1	189.3	201.5	213.0	226.3	239.3	253.8	6.6
공적연금	62.0	66.6	73.1	80.4	87.2	93.9	99.9	107.6	115.2	124.2	8.0
사회보험	34.1	35.9	38.0	39.9	41.9	44.1	46.4	48.6	50.5	52.5	4.9
공공부조	33.3	37.5	40.1	43.0	46.0	48.8	51.6	54.4	57.2	60.2	6.8
기타	13.7	13.7	13.5	13.7	14.1	14.6	15.1	15.7	16.3	16.9	2.3
지방이전재원	166.7	156.9	162.1	167.0	175.4	183.3	192.0	200.7	209.8	219.3	3.1
이자지출	18.8	21.4	22.6	24.0	25.5	27.1	28.7	30.4	32.3	34.1	6.9
기타 의무지출	13.4	7.3	7.4	7.2	7.3	7.6	7.9	8.2	8.5	8.8	-4.6
재량지출	349.8	297.3	307.9	316.7	323.6	337.0	350.3	363.8	377.4	391.6	1.3
(GDP 대비 비율)	(16.1)	(13.1)	(13.0)	(12.9)	(12.6)	(12.7)	(12.7)	(12.7)	(12.8)	(1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재정수지 전망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68.6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3.2\%$), 2023년 14.0조원 적자($\Delta 0.6\%$), 2031년 50.0조원 적자($\Delta 1.6\%$)로 전망
 - 2023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0.1% 감소하나, 총지출은 재량지출 감축 등으로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통합재정수지 개선
 - 2024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 증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022년 49.5조원 흑자(GDP 대비 2.3%)에서 2031년 26.8조원 흑자(0.9%)로 전망
 - 인구 감소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 급여지출의 증가 등으로 흑자 규모 감소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8.1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5.4\%$), 2023년 58.2조원 적자($\Delta 2.6\%$), 2031년 76.8조원 적자($\Delta 2.5\%$)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이후 $\Delta 2.6\sim\Delta 2.3\%$ 수준 유지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통합재정수지	-68.6	-14.0	-17.1	-18.1	-17.9	-24.4	-29.9	-35.5	-43.8	-50.0
(GDP 대비 비율)	(-3.2)	(-0.6)	(-0.7)	(-0.7)	(-0.7)	(-0.9)	(-1.1)	(-1.2)	(-1.5)	(-1.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5	44.2	42.8	41.7	39.9	38.2	37.5	34.7	31.2	26.8
(GDP 대비 비율)	(2.3)	(1.9)	(1.8)	(1.7)	(1.6)	(1.4)	(1.4)	(1.2)	(1.1)	(0.9)
관리재정수지	-118.1	-58.2	-59.8	-59.8	-57.8	-62.6	-67.3	-70.3	-75.0	-76.8
(GDP 대비 비율)	(-5.4)	(-2.6)	(-2.5)	(-2.4)	(-2.3)	(-2.4)	(-2.4)	(-2.5)	(-2.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가채무 전망

-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 전망
 - 중앙정부 채무는 2022년 1,037.7조원(GDP 대비 47.8%)에서 2031년 1,756.2조원(57.4%)으로 연평균 6.0% 증가
 - 적자성 채무는 2022년 647.1조원(GDP 대비 29.8%)에서 2031년 1,185.1조원(38.7%)으로 연평균 7.0%, 금융성 채무는 2022년 390.6조원(GDP 대비 18.0%)에서 2031년 571.0조원(18.7%)으로 연평균 4.3% 증가
 -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2년 31.1조원(GDP 대비 1.4%)에서 2031년 33.4조원(1.1%)으로 연평균 0.8% 증가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A+B)	1,068.8	1,134.8	1,202.4	1,275.5	1,348.8	1,420.9	1,507.7	1,597.6	1,692.3	1,789.6	5.9
(GDP 대비 비율)	(49.3)	(50.0)	(50.8)	(51.8)	(52.7)	(53.4)	(54.7)	(55.9)	(57.2)	(58.5)	
중앙정부 채무(A)	1,037.7	1,102.2	1,170.7	1,245.2	1,320.8	1,391.8	1,477.6	1,566.4	1,660.0	1,756.2	6.0
(GDP 대비 비율)	(47.8)	(48.6)	(49.5)	(50.5)	(51.6)	(52.3)	(53.6)	(54.8)	(56.1)	(57.4)	
적자성 채무	647.1	688.9	738.0	789.8	843.1	895.5	962.9	1,033.2	1,108.3	1,185.1	7.0
(GDP 대비 비율)	(29.8)	(30.4)	(31.2)	(32.1)	(32.9)	(33.7)	(34.9)	(36.2)	(37.5)	(38.7)	
금융성 채무	390.6	413.3	432.7	455.4	477.7	496.3	514.7	533.1	551.8	571.0	4.3
(GDP 대비 비율)	(18.0)	(18.2)	(18.3)	(18.5)	(18.7)	(18.7)	(18.7)	(18.7)	(18.7)	(18.7)	
지방정부 순채무(B)	31.1	32.6	31.7	30.3	28.0	29.1	30.1	31.2	32.3	33.4	0.8
(GDP 대비 비율)	(1.4)	(1.4)	(1.3)	(1.2)	(1.1)	(1.1)	(1.1)	(1.1)	(1.1)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중기재정전망의 결과 비교
 - 기준전망은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 시점(2022. 9. 2.)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전망치로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 미반영
-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음

주요 정책 변화

	주요 정책 변화
국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등 ○ (법인세) 세율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등 ○ (기타 세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국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유물매각대) 국유재산 매각 계획 확대 ○ (경상이전수입) 전기요금 인상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생계급여) 지역구분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 ○ (의료급여) 지역구분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신설 ○ (아동수당) 국고보조율 인상

주요 정책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 위탁병원 이용자의 기준 연령 폐지 등 ○ (장애수당(기초)) 급여단가 인상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효기간 연장 																					
재량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전망)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전망)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2025년 금액 반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조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2024</th> <th>2025</th> <th>2026</th> </tr> </thead> <tbody> <tr> <td>2022~2026년 계획</td> <td></td> <td>349.8</td> <td>297.3</td> <td>307.9</td> <td>316.7</td> <td>323.6</td> </tr> <tr> <td>2021~2025년 계획</td> <td>325.8</td> <td>303.3</td> <td>323.0</td> <td>336.2</td> <td>348.4</td> <td></td> </tr> </tbody> </table> <p>주: 2022~2026년 계획의 2022년은 추경(2회), 2021~2025년 계획의 2021년은 추경(2회) 기준</p>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년 계획		349.8	297.3	307.9	316.7	323.6	2021~2025년 계획	325.8	303.3	323.0	336.2	348.4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년 계획		349.8	297.3	307.9	316.7	323.6																
2021~2025년 계획	325.8	303.3	323.0	336.2	348.4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 (총수입)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은 기준 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5.2~17.0조원 낮으며, 향후 10년 동안 총 130.3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기준전망에 비해 감소하는데, 세수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장려세제 지급액 인상 등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등
 - (기타 세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
 - 국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확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기준전망 대비 증가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총수입	623.2	622.6	647.7	673.9	703.2	732.0	762.0	794.0	823.4	857.6	3.6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474.0	496.3	519.0	542.6	567.3	4.1
국세외수입	228.3	223.1	234.5	241.5	249.4	258.0	265.7	274.9	280.9	290.3	2.7
기준전망(B)											
총수입	623.2	627.8	661.9	688.9	718.1	747.4	777.8	810.1	840.0	874.6	3.8
국세수입	394.9	406.3	429.0	449.0	470.5	491.1	513.9	537.0	561.0	586.1	4.5
국세외수입	228.3	221.5	232.9	239.9	247.7	256.2	263.9	273.1	279.1	288.4	2.6
차 이(A-B)											합계
총수입	0.0	-5.2	-14.2	-15.0	-15.0	-15.4	-15.8	-16.2	-16.6	-17.0	-130.3
국세수입	0.0	-6.9	-15.9	-16.6	-16.7	-17.1	-17.5	-18.0	-18.4	-18.8	-145.9
국세외수입	0.0	1.6	1.7	1.7	1.7	1.7	1.8	1.8	1.8	1.8	1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국세수입	0.0	-6.9	-15.9	-16.6	-16.7	-17.1	-17.5	-18.0	-18.4	-18.8	-145.9
소득세	0.0	-3.5	-5.1	-3.9	-3.3	-3.4	-3.4	-3.5	-3.6	-3.6	-33.4
법인세	0.0	-0.5	-7.3	-7.8	-8.3	-8.5	-8.8	-9.1	-9.4	-9.7	-69.3
부가가치세	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7
기타	0.0	-2.8	-3.5	-5.0	-5.1	-5.2	-5.3	-5.3	-5.4	-5.5	-4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총지출) 재량지출 감축 계획 등의 영향으로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8.3~39.4조원 낮으며, 향후 10년 동안 총 232.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의무지출은 연도별로 0.2~9.4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총 66.4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차이는 국세수입 전망 차이에 따른 지방이전재원의 감소, 관리재정수지 개선에 따른 국고채 이자지출의 감소에 주로 기인

- 재량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16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차이는 재정운용 기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21~2025년)과 2022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22~2026년)의 차이에서 기인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총지출	691.8	636.6	664.8	692.0	721.1	756.4	791.9	829.5	867.2	907.6	3.1
의무지출	342.0	339.3	356.8	375.3	397.5	419.4	441.6	465.7	489.8	516.0	4.7
재량지출	349.8	297.3	307.9	316.7	323.6	337.0	350.3	363.8	377.4	391.6	1.3
기준전망(B)											
총지출	691.8	662.5	698.0	731.1	760.5	789.6	818.0	847.6	876.6	915.8	3.2
의무지출	342.0	339.5	361.8	382.7	405.6	428.1	450.8	475.0	499.1	525.1	4.9
재량지출	349.8	323.0	336.2	348.4	354.9	361.4	367.2	372.6	377.5	390.7	1.2
차 이(A-B)											합계
총지출	0.0	-25.9	-33.2	-39.1	-39.4	-33.2	-26.1	-18.2	-9.4	-8.3	-232.7
의무지출	0.0	-0.2	-5.0	-7.4	-8.1	-8.7	-9.2	-9.4	-9.3	-9.1	-66.4
재량지출	0.0	-25.7	-28.3	-31.7	-31.3	-24.4	-16.9	-8.8	-0.1	0.9	-16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의무지출	0.0	-0.2	-5.0	-7.4	-8.1	-8.7	-9.2	-9.4	-9.3	-9.1	-66.4
복지 분야	0.0	1.8	1.7	1.9	2.0	2.1	2.2	2.3	2.4	2.5	19.1
건강보험	0.0	0.8	0.8	0.9	1.0	1.0	1.1	1.2	1.2	1.3	9.4
기초생활보장	0.0	0.6	0.7	0.7	0.7	0.7	0.8	0.8	0.8	0.8	6.5
기초연금	0.0	0.5	0.6	0.6	0.7	0.7	0.8	0.8	0.9	0.9	6.6
영유아보육료	0.0	-0.2	-0.5	-0.5	-0.5	-0.5	-0.6	-0.6	-0.6	-0.7	-4.6
지방이전재원	0.0	-1.8	-5.9	-7.9	-7.9	-8.1	-8.3	-8.5	-8.6	-8.8	-65.8
이자지출	0.0	-0.3	-0.8	-1.4	-2.1	-2.7	-3.1	-3.2	-3.1	-2.8	-19.7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복지 분야의 하위 항목은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의무 지출 항목에 한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 및 재량지출 감축 계획 등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102.4조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의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수지 변동이 없으므로 관리재정수지의 개선분은 통합재정수지 개선분과 동일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관리재정수지	-118.1	-58.2	-59.8	-59.8	-57.8	-62.6	-67.3	-70.3	-75.0	-76.8	
(GDP 대비 비율)	(-5.4)	(-2.6)	(-2.5)	(-2.4)	(-2.3)	(-2.4)	(-2.4)	(-2.5)	(-2.5)	(-2.5)	
기준전망(B)											
관리재정수지	-118.1	-78.9	-78.9	-83.9	-82.3	-80.4	-77.7	-72.2	-67.8	-68.1	
(GDP 대비 비율)	(-5.4)	(-3.5)	(-3.3)	(-3.4)	(-3.2)	(-3.0)	(-2.8)	(-2.5)	(-2.3)	(-2.2)	
차 이(A-B)											합계
관리재정수지	0.0	20.7	19.0	24.1	24.4	17.8	10.3	2.0	-7.2	-8.7	102.4
(GDP 대비 비율)	(0.0)	(0.9)	(0.8)	(1.0)	(1.0)	(0.7)	(0.4)	(0.1)	(-0.2)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채무) 정부 세법개정안 및 재량지출 감축 계획 등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간 9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GDP 대비 비율은 2031년 기준 3.2%p 개선)
 -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제외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기준전망과 중기재정전망을 동일하게 가정하므로 차이 없음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국가채무	1,068.8	1,134.8	1,202.4	1,275.5	1,348.8	1,420.9	1,507.7	1,597.6	1,692.3	1,789.6	5.9
(GDP 대비 비율)	(49.3)	(50.0)	(50.8)	(51.8)	(52.7)	(53.4)	(54.7)	(55.9)	(57.2)	(58.5)	
기준전망(B)											
국가채무	1,068.8	1,151.1	1,236.0	1,333.0	1,431.9	1,521.8	1,618.9	1,710.8	1,798.3	1,886.9	6.5
(GDP 대비 비율)	(49.3)	(50.7)	(52.2)	(54.1)	(55.9)	(57.2)	(58.7)	(59.9)	(60.8)	(61.7)	
차 이(A-B)											
국가채무	0.0	-16.3	-33.6	-57.5	-83.1	-100.9	-111.2	-113.2	-106.0	-97.3	
(GDP 대비 비율)	(0.0)	(-0.7)	(-1.4)	(-2.3)	(-3.2)	(-3.8)	(-4.0)	(-4.0)	(-3.6)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2026년 동안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Delta 2.6 \sim \Delta 2.2\%$ 수준 유지,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에 52.2%로 전망
 - 2023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총수입 증가율은 2022~2026년 동안 연평균 4.1%, 총지출 증가율은 1.8%
 -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2022. 6. 16.),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2022. 7. 7.) 등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계획 발표
 -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Delta 3\%$ 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동 한도를 $\Delta 2\%$ 로 축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2		2023 예산안	2024 계획	2025 계획	2026 계획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수입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6.6	4.1
총지출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4.6	1.8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14.0	-13.7	-13.4		
(GDP 대비 비율)	(-2.5)	(-3.3)	(-0.6)	(-0.6)	(-0.6)	(-0.5)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58.6	-57.4	-56.6		
(GDP 대비 비율)	(-4.4)	(-5.1)	(-2.6)	(-2.5)	(-2.3)	(-2.2)		
국가채무	1,064.4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6.0	5.9
(GDP 대비 비율)	(50.0)	(49.7)	(49.8)	(50.6)	(51.4)	(52.2)		
경상GDP 성장률		5.2	4.5	4.2	4.2	4.0		

주: GDP 대비 비율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 기준임(2022년의 경우 본예산(추경) 확정 시 전망치, 2023년 이후는 예산안 제출 시점의 전망치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9.

□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NABO 중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총수입은 5년 동안 21.0조원 낮으며, 총지출은 9.9조원 낮은 수준

- 이러한 차이는 총수입의 경우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전망 차이, 총지출은 지방이전재원 및 이자지출의 차이 등에 주로 기인
 - 다만, 2022년의 경우는 총수입·총지출 모두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는데, 총수입은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이 정부 예산보다 높게 전망되고, 총지출은 2022년 지방이전재원 정산분(11.2조원)을 반영한 것에 주로 기인
- 총수입 차이가 총지출 차이보다 크므로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보다 5년 동안 12.3조원 크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기준으로 0.5%p 높음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총수입	14.1	-3.4	-8.0	-11.7	-12.0	-21.0
국세수입	-1.8	-1.0	-5.6	-6.8	-6.1	-21.3
국세외수입	15.9	-2.3	-2.5	-4.9	-5.9	0.3
총지출	12.3	-2.5	-5.0	-7.2	-7.6	-9.9
의무지출	12.3	-2.5	-5.0	-7.2	-7.6	-9.9
복지분야	3.4	-0.9	-0.1	-0.5	-0.5	1.3
지방이전재원	8.9	0.0	-1.7	-2.2	-1.7	3.3
이자지출	0.0	-1.5	-3.2	-4.5	-5.4	-14.5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재량지출	0.0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1.8	-0.9	-3.1	-4.4	-4.5	-11.1
(GDP 대비 비율)	(0.1)	(-0.0)	(-0.1)	(-0.2)	(-0.2)	
관리재정수지	-7.3	-0.1	-1.3	-2.4	-1.3	-12.3
(GDP 대비 비율)	(-0.4)	(-0.0)	(-0.1)	(-0.1)	(-0.1)	
국가채무	0.0	0.0	1.2	3.6	4.9	
(GDP 대비 비율)	(0.2)	(0.2)	(0.2)	(0.3)	(0.5)	

주: 1. GDP 대비 비율은 중기재정전망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 기준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2022. 6. 16.) 기준임

2.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준칙의 준수가능성 분석) 정부의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변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 충족 필요

- 첫째, 정부의 재량지출 통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속력 있는 지출 통제 필요
 -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과 실적 간 차이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 실현은 불확실성이 큼
- 둘째, 정부의 국세외수입 증가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확충 노력 필요
 -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을 제외한 국세외수입의 증가율은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IV. 요약 및 결론

-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총량 전망
 -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57.6조원(28.0%)으로 연평균 3.6% 증가 전망
 -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07.6조원(29.7%)으로 연평균 3.1% 증가 전망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118.1조원(GDP 대비 Δ 5.4%), 2023년 58.2조원(Δ 2.6%), 2031년 76.8조원(Δ 2.5%)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 전망

-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기준전망(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과 비교할 때, 이번 예산안 등으로 향후 10년 동안 총수입은 130.3조원 감소, 총지출은 232.7조원 감소 예상
 -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총수입보다 총지출 감소폭이 크므로 관리재정수지는 10년 동안 102.4조원 개선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1년 기준으로 3.2%p 개선

-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재량지출 감축 계획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 상의 한도 준수 가능 예상
 - 정부는 2023~2026년 동안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Δ 2.6~ Δ 2.2%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2026년 국가채무 비율 52.2%)
 -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재량지출 감축 계획과 국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충족되어야 실현될 수 있음에 유의

I.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정부는 지난 9월 2일 「2023년도 예산안」(이하 “예산안”) 및 향후 5개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자원배분계획을 담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총지출은 639.0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정부주도 확장재정에서 탈피, 민간·시장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수입은 16.8조원(2.8%) 증가, 총지출은 40.5조원(△6.0%) 감소한 규모이다.²⁾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중기적 시계에서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동 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이후 GDP 대비 △2.6~△2.2% 수준이며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7%)에서 2026년 1,343.9조원(52.2%)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의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하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을 전망한다. 또한, 정부가

1) 기획재정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8. 30.

2) 2023년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감을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수입은 72.4조원(13.1%) 증가하며, 총지출은 31.4조원(5.2%) 증가한다.

3) GDP 대비 비율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2022년의 경우 본예산(추경) 확정 시 전망치, 2023년 이후는 예산안 제출 시점의 전망치 기준). 이때 2022년 추경(2회) 기준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49.7%이나, 2022년 경상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최근 경제전망(「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2. 6. 16.)을 고려할 때 정부의 2022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추정된다.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전망치인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를 추정한다. 이때 기준전망은 2023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2022. 9. 2.)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I장에서 중기재정전망의 기초변수인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II장에서는 주요 재정총량(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에 대해 중기재정전망의 전망 방법과 결과를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 기조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요약한다.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2021. 12.)의 2022~2031년 추계치(중위 가정)를 사용한다.

중기재정전망에 적용한 총 인구 수는 2022년 5,163만명에서 2031년 5,114만명으로 연평균 0.11%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 2019)에 따르면, 총 인구 수는 2028년 정점(5,194만명)에 도달한 이후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실제 인구 감소는 2021년부터 시작되어 인구 감소 시점이 8년 앞당겨졌다. 이는 출생아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 2019년 추계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30만명에 달하였으나, 2021년 추계에서는 25만명으로 약 5.5만명의 차이가 있다. 또한, 2022년~2031년 동안의 자연감소(출생아수 - 사망자수) 폭이 4~8만명에서 8~11만명으로 커져 총 인구 수는 더욱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는 2023년에 23만명(합계출산율 0.73명)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31년 31만명(합계출산율 1.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0~5세

영유아 수는 2022년 187만명에서 2031년 166만명으로 연평균 1.3%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902만명에서 2031년 1,349만명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빠른 증가세로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중도 2022년 17.5%에서 2031년 26.4%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에 이르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6%가 되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총 인구 수(만명)	5,163	5,156	5,150	5,145	5,140	5,135	5,130	5,125	5,120	5,114
총 인구 증가율(%)	-0.23	-0.14	-0.11	-0.10	-0.10	-0.10	-0.09	-0.10	-0.10	-0.11
출생아 수(만명)	25	23	23	25	26	27	29	30	31	31
합계출산율(명)	0.77	0.73	0.70	0.74	0.78	0.83	0.87	0.91	0.96	1.00
0~5세 인구 수(만명)	187	172	160	152	147	146	148	152	159	166
0~5세 인구 비중(%)	3.6	3.3	3.1	2.9	2.9	2.9	2.9	3.0	3.1	3.2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902	950	1,001	1,059	1,120	1,167	1,220	1,260	1,306	1,349
65세 이상 인구 비중(%)	17.5	18.4	19.4	20.6	21.8	22.7	23.8	24.6	25.5	26.4
사망자 수(만명)	32	33	34	35	37	38	39	40	41	42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2021.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시경제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2022~2031년 거시경제 전망치를 사용한다.⁵⁾ 주요 거시경제변수로는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금리, GDP디플레이터 등이 포함된다.

4) UN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5) NABO는 최근 발표한 5년 전망(「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 10.)을 10년으로 확장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였으며, 이를 동 보고서에 사용하였다.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평균
실질GDP 성장률	2.5	2.1	2.3	2.3	2.1	2.1	2.0	1.9	1.8	1.8	2.1
경상GDP 성장률	4.7	4.6	4.3	4.1	3.9	3.9	3.7	3.6	3.5	3.5	4.0
실업률	3.0	3.4	3.7	3.7	3.7	3.7	3.7	3.7	3.7	3.7	3.6
취업자 수 증가율	2.9	0.3	0.4	0.4	0.4	0.3	0.2	0.1	0.1	0.1	0.5
명목임금상승률	4.9	3.9	3.9	3.6	3.3	3.3	3.2	3.1	3.1	3.1	3.5
소비자물가상승률	5.2	3.3	2.7	2.4	2.1	2.0	2.0	2.0	2.0	2.0	2.6
국고채금리(3년 만기)	3.0	3.0	2.8	2.6	2.6	2.6	2.6	2.6	2.6	2.6	2.7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2.2	2.5	2.0	1.8	1.8	1.8	1.7	1.7	1.7	1.7	1.9

주: 평균은 2022~2031년 단순 평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실질GDP 성장률은 2022~2031년 동안 평균 2.1%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이전 10년(2012~2021년) 기간의 실질GDP 성장률의 평균인 2.6%와 비교해서 0.5%p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GDP 성장률 경로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1년 4.1% → '22년 2.5%). 2023년에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1%에 머물 전망이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잠재GDP 수준에 부합하는 경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4~2025년 소폭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져 2031년에는 1.8%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GDP 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합산하여 전망한다. 2022~2031년 동안 경상GDP 성장률은 평균 4.0%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2024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GDP디플레이터가 2% 이상 상승하면서 경상GDP 성장률도 4%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2031년에는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기간 중 성장한 비대면·디지털전환 관련 업종 및 보건업 등의 높은 노동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정상화와 위드

코로나 전환 등에 따라 제조업과 대면서비스업의 노동수요가 회복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부터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위축되어 2023~2027년 동안 취업자 수 증가율은 평균 0.3~0.4% 수준을 기록하다가 이후 2029년부터는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2022년 3.0%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24년부터 3.7%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명목임금상승률은 2022년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4.9% 상승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31년 3.1%를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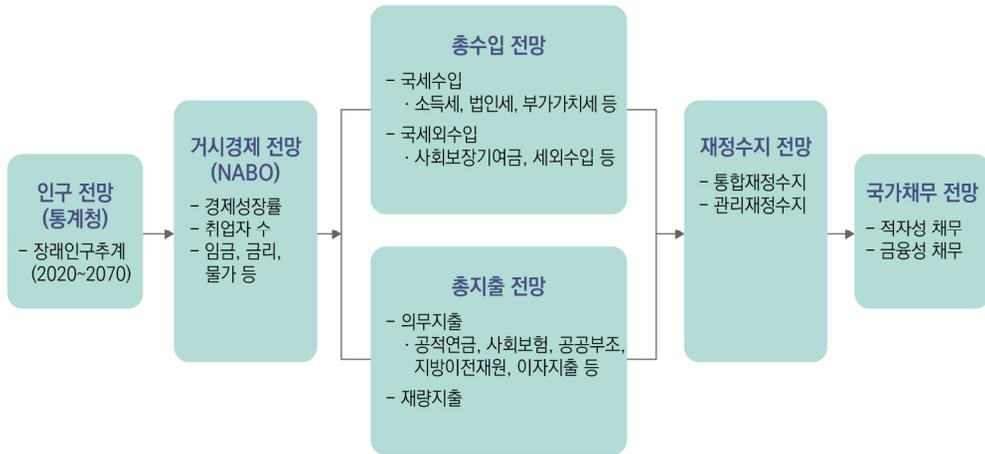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2031년 동안 평균 2.6%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2022년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 소비수요 증대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이후로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화, 소비수요 둔화 등으로 상승폭이 점차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인 2.0%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물가 불안 확산에 따른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강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및 2023년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가파른 금리 상승 등에 따른 향후 경기 하강 우려, 물가상승률 둔화 등은 금리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2023년 국고채금리는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이후 국고채금리는 실질GDP 성장률 하락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며 2024년 2.8%를 기록한 이후 2025~2031년 2.6%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다. 전망 방법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각 전망항목에 사용된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경상가격으로 전망하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입, 기타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한다. 국세수입은 세목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국세외수입은 주요 수입항을 기준으로 각각의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며, 의무지출은 분야별·세부사업별로 법령의 지출요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총량 수준에서 전망한다.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하며, 복지 분야는 다시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타 복지지출로 구분한다.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전망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관리재정수지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II.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1. 개 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23.2	622.6	647.7	673.9	703.2	732.0	762.0	794.0	823.4	857.6	3.6
(GDP 대비 비율)	(28.7)	(27.4)	(27.4)	(27.4)	(27.5)	(27.5)	(27.6)	(27.8)	(27.8)	(28.0)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474.0	496.3	519.0	542.6	567.3	4.1
(전년 대비 증가율)	(14.8)	(1.2)	(3.4)	(4.6)	(5.0)	(4.5)	(4.7)	(4.6)	(4.5)	(4.6)	
국세외수입	228.3	223.1	234.5	241.5	249.4	258.0	265.7	274.9	280.9	290.3	2.7
(전년 대비 증가율)	(0.9)	(-2.3)	(5.1)	(3.0)	(3.2)	(3.4)	(3.0)	(3.5)	(2.2)	(3.3)	
총지출	691.8	636.6	664.8	692.0	721.1	756.4	791.9	829.5	867.2	907.6	3.1
(GDP 대비 비율)	(31.9)	(28.1)	(28.1)	(28.1)	(28.2)	(28.4)	(28.7)	(29.0)	(29.3)	(29.7)	
의무지출	342.0	339.3	356.8	375.3	397.5	419.4	441.6	465.7	489.8	516.0	4.7
(전년 대비 증가율)	(22.4)	(-0.8)	(5.2)	(5.2)	(5.9)	(5.5)	(5.3)	(5.5)	(5.2)	(5.4)	
재량지출	349.8	297.3	307.9	316.7	323.6	337.0	350.3	363.8	377.4	391.6	1.3
(전년 대비 증가율)	(9.7)	(-15.0)	(3.6)	(2.8)	(2.2)	(4.2)	(4.0)	(3.8)	(3.7)	(3.7)	
통합재정수지	-68.6	-14.0	-17.1	-18.1	-17.9	-24.4	-29.9	-35.5	-43.8	-50.0	
(GDP 대비 비율)	(-3.2)	(-0.6)	(-0.7)	(-0.7)	(-0.7)	(-0.9)	(-1.1)	(-1.2)	(-1.5)	(-1.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5	44.2	42.8	41.7	39.9	38.2	37.5	34.7	31.2	26.8	
(GDP 대비 비율)	(2.3)	(1.9)	(1.8)	(1.7)	(1.6)	(1.4)	(1.4)	(1.2)	(1.1)	(0.9)	
관리재정수지	-118.1	-58.2	-59.8	-59.8	-57.8	-62.6	-67.3	-70.3	-75.0	-76.8	
(GDP 대비 비율)	(-5.4)	(-2.6)	(-2.5)	(-2.4)	(-2.3)	(-2.4)	(-2.4)	(-2.5)	(-2.5)	(-2.5)	
국가채무	1,068.8	1,134.8	1,202.4	1,275.5	1,348.8	1,420.9	1,507.7	1,597.6	1,692.3	1,789.6	5.9
(GDP 대비 비율)	(49.3)	(50.0)	(50.8)	(51.8)	(52.7)	(53.4)	(54.7)	(55.9)	(57.2)	(58.5)	

주: 2022년 의무지출에는 2022년 지방이전재원 정산분(11.2조원)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57.6조원(GDP 대비 28.0%)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07.6조원(GDP 대비 29.7%)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68.6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3.2\%$)에서 2023년 14.0조원 적자($\Delta 0.6\%$), 2031년 50.0조원 적자($\Delta 1.6\%$)로 전망된다. 2023년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0.1% 감소하고 총지출은 재량지출 감축 등으로 8.0%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나, 2024년 이후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증가한다.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8.1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5.4\%$), 2023년 58.2조원 적자($\Delta 2.6\%$), 2031년 76.8조원 적자($\Delta 2.5\%$)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이후 $\Delta 2.6\sim\Delta 2.3\%$ 수준을 유지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총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각 세목별로 기준전망을 하고, 여기에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다. 전망 결과, 국세수입은 2022년 394.9조원(GDP 대비 18.2%)에서 2031년 567.3조원(18.5%)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자산시장 호조 및 법인실적 개선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직전 5년(2017~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 6.7%와 비교하면 2.6%p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세수입을 견인하던 자산 관련 세수 및 법인세의 증가세 둔화 전망과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 세수 감소형 세법 개정 등에 기인한다.

[표 4]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474.0	496.3	519.0	542.6	567.3	4.1
(GDP 대비 비율)	(18.2)	(17.6)	(17.5)	(17.6)	(17.7)	(17.8)	(18.0)	(18.2)	(18.3)	(18.5)	
소득세	129.5	132.4	141.1	152.9	164.5	175.8	187.1	198.7	211.0	224.1	6.3
법인세	102.3	106.0	104.5	107.0	110.9	115.0	119.3	123.6	128.0	132.4	2.9
부가가치세	80.1	82.7	87.3	91.1	94.7	98.6	102.5	106.5	110.5	114.8	4.1
기타	83.0	78.4	80.3	81.4	83.7	84.5	87.4	90.2	93.0	96.0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소득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각 세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 수, 명목임금상승률, 실효세율, 경상GDP 등을 바탕으로 전망한다. 양도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전망모형을 이용하였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를 비롯하여 환율, 채권발행 잔액,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전망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망치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등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소득세는 2022년 129.5조원에서 2031년 224.1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근로자 수 및 경상GDP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2025년을 고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양도소득세 증가율도 이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 수, 명목임금상승률, 실효세율,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양도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이자·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환율, 채권발행 잔액,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2) 법인세

법인세는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를 구분하여,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각각을 전망하고 합산하여 추계한다.

신고분 법인세는 먼저 2022년 상반기까지의 법인 실적 및 8월까지의 누적 법인세 실적을 고려하여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2년의 신고분 법인세수를 전망한다. 다음으로 경상GDP, 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교역조건, 특이요인을 반영한 연도별 더미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망모형을 통해 2031년까지의 신고분 법인세수를 전망한다. 원천분 법인세는 8월까지의 누적 세수실적 및 금융여건을 반영하여 2022년 전망치를 추정한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의 금융자산, 회사채금리, 경상GDP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망모형을 통해 2031년까지 전망한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된 신고분 및 원천분 법인세를 합산한 후,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등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법인세는 2022년 102.3조원에서 2031년 132.4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2022년 법인세는 전년 대비 31.9조원(4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이후에는 경상GDP,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의 전망 추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 향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여 2031년 132.4조원까지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분: 경상GDP, 원/달러 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교역조건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원천분: 경상GDP, 비금융법인의 자산, 회사채금리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하며,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망치에 지방소비세율 상향('22년 23.7% → '23년 이후 25.3%)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부가가치세는 2022년 80.1조원에서 2031년 114.8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31년 동안 민간소비는 연평균 4.3%, 통관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10년 간 부가가치세 증가율은 지난 5년(2017~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1.5%)⁶⁾보다 높을 전망이다.

[표 7]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4) 기타 세목

기타 세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세목별 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또한,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부가세(surtax, 附加稅)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경상GDP 증가율 및 탄력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치에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6) 2017~2021년 기간 지방소비세율 인상('19년 11% → 15%, '20년 15% → 21%)이 반영되었다.

전망 결과, 기타 세목은 2022년 83.0조원에서 2031년 96.0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관련 세수(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경우 유류소비 증가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 등을 감안하였으며, 자산 관련 세수(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가시화된 부동산 및 주식 시장 가격의 안정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표 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세목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상속세 및 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등 자산종류별 상속 및 증여가액 비중과 자산종류별 가격 상승률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전망 상속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으로 인한 증가분을 고려하여 전망
개별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분 개별소비세는 경상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향후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최근의 출고량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 자동차분 개별소비세는 민간소비 등을 이용하여 전망
증권거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와 KOSDAQ 시장별 거래대금을 경상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 후 시장별 세율 반영
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GDP 성장률, 원화대출금 증가율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휘발유 및 경유의 향후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최근의 실효세율 추이,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
종합부동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

나.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 중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연금수입(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각 기금의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동 기금을 제외한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은 수입의 경제적 성질(수입관, 수입항)을 고려한 시계열 분석 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국세외수입은 2022년 228.3조원에서 2031년 290.3조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이다.

[표 9]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228.3	223.1	234.5	241.5	249.4	258.0	265.7	274.9	280.9	290.3	2.7
(GDP 대비 비율)	(10.5)	(9.8)	(9.9)	(9.8)	(9.7)	(9.7)	(9.6)	(9.6)	(9.5)	(9.5)	
사회보장기여금	82.0	86.3	89.7	93.0	96.0	98.7	101.8	104.5	107.3	109.9	3.3
연금수입	16.6	18.5	19.3	21.1	22.2	24.1	26.1	28.1	29.0	31.1	7.2
기타	129.7	118.4	125.5	127.5	131.1	135.1	137.8	142.3	144.6	149.3	1.6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국민연금기여금 수입⁷⁾은 유형별(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유형별 가입자 수는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성별에 따른 유형별 이동율, 연령별·성별 신규가입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령별·성별·가입자 유형별 소득분포 등을 고려하되,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사학연금기여금 수입⁸⁾은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가입자의 직종은 교원, 사무직원, 병원직원으로 구분하는데, 교원과 사무직원 수는 학령인구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가입자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계하고, 병원직원 수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비 지출 실적을 추가로 고려하여 추계한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기준소득월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한다.

7) 고용주부담금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수입(보험료율 9.0%)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료율 4.5%)이고, 피고용자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4.5%)과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9.0%)이다.

8) 고용주부담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주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연금부담금(보험료율 5.294%), 재해보상부담금(개인 연금부담금의 4.54%), 퇴직수당부담금(대학 소속 가입자 퇴직수당 소요액의 40%)이고, 피고용자부담금은 연금부담금 중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율 9%)이다.

고용보험기여금 수입⁹⁾은 보험사업별(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전망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며, 보수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다. 최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이 확대되고 있는데,¹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 6. 28., 시행 2022. 7. 1.)에 따른 5개 직종¹¹⁾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을 반영하였다.

산재보험기여금 수입¹²⁾은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평균 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전망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며, 보수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다. 최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개편되고 적용 직종도 확대되고 있는데,¹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 3. 15., 시행 2022. 7. 1.)에 따른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료 수입을 반영하였다.

9)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부담금, 보험료율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보험료율 0.25 ~ 0.85%).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이다. 자영업자인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이다.

10)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고용보험법」 개정, 2021.1.5.) 처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점차 직종이 확대되고 있다.

11) 5개 직종은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이다.

12) 산재보험료는 2022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0.1%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지만(고용주부담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부담금).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22. 6. 10., 시행 2023. 7. 1.)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확대·개편되었다.

[표 1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수)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성별에 따른 가입자 유형별 이동율, 연령별·성별 신규가입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 - (기준소득월액) 연령별·성별·가입자 유형별 소득분포 등을 고려하고,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사학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가입자 실적치, 의료비 지출 실적치 등을 바탕으로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가입자 수를 추계 - (기준소득월액) 가입자의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기준소득월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며, 보수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보험사업별,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평균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장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며, 보수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평균 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기여금의 비율로 산출하며,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액에 근거하여 산출

전망 결과, 국민연금기여금은 2022년 54.5조원에서 2031년 69.3조원으로 연평균 2.7%, 사학연금기여금은 2022년 3.7조원에서 2031년 4.2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동안 가입자 수는 감소하지만, 명목임금상승률의 영향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기여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여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5.6조원에서 2031년 23.5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기여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 8.3조원에서 2031년 12.9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중기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장기여금	82.0	86.3	89.7	93.0	96.0	98.7	101.8	104.5	107.3	109.9	3.3
국민연금	54.5	56.6	58.8	60.5	62.1	63.5	65.2	66.6	68.0	69.3	2.7
사학연금	3.7	3.8	3.9	3.9	4.0	4.0	4.1	4.1	4.2	4.2	1.6
고용보험	15.6	17.1	17.6	18.5	19.3	20.2	21.0	21.8	22.6	23.5	4.7
산재보험	8.3	8.8	9.4	10.0	10.6	11.1	11.5	12.0	12.4	12.9	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연금수입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군인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합계를 말한다.

공무원연금기여금 수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기여금부담률과 가입자 수이며, 기여금부담률을 현행 9%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입자 수의 경우, 인사혁신처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 등을 반영하여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2%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군인연금기여금 수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기여금부담률과 가입자 수이며, 기여금부담률은 현행 7%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입자 수의 경우, 국방부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계급별 정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1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수입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무원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별·재직기간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 기여금부담률 9% 유지 ○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구성 - 각 항목별 총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금액의 비율(최근 5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추정)을 적용
군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수는 국방부의 연도별 군인 정원 적용 -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 기여금부담률 7% 유지

전망 결과, 공무원연금기여금은 2022년 15.9조원에서 2031년 30.3조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 수의 증가율은 0.2%로 낮아 공무원연금기여금의 증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상승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증가에 기인한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 기여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부담금의 증가로 기여금의 전체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¹⁴⁾ 군인연금기여금의 경우 2022년 0.7조원에서 2031년 0.9조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이다.

[표 13] 중기재정전망: 연금수입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연금수입	16.6	18.5	19.3	21.1	22.2	24.1	26.1	28.1	29.0	31.1	7.2
공무원연금	15.9	17.7	18.5	20.3	21.4	23.3	25.3	27.3	28.2	30.3	7.4
군인연금	0.7	0.7	0.8	0.8	0.8	0.8	0.8	0.9	0.9	0.9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2022~2031년 동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연평균 3.3% 증가하고, 연금액 인상 시 적용되는 소비자가상승률이 전망기간 전반부에 상대적으로 높아 퇴직연금 지출액 증가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지출액 중 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전금도 연동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타 국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을 제외한 국세외수입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등 수입의 경제적 성질(수입관, 수입항)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2022년의 경우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진도율을 고려하여 전망하며, 2023년 이후는 NABO의 경상GDP 및 명목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등을 설명 변수로 하는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 확대 및 전기요금 인상 등 정책 변화의 효과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을 제외한 국세외수입은 2022년 129.7조원에서 2031년 149.3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전망이다.

[표 1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국세외수입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 양곡사업수입, 우정사업수입, 조달사업수입,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수입항별로 구분하여 NABO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해 전망
재산수입	○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수입항별로 회계·기금을 구분하여 NABO 경상GDP 및 명목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해 전망
관유물매각대	○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 회계·기금을 구분하여 NABO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해 전망
용자 및 전대차 관원금 회수	

3. 총지출 전망

가.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한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급여별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 등을 추정하여 전망하며, 지급요건과 지원단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다. 지방이전재원은 국세수입 전망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현행 교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자지출은 국고채 및 국민주택채 이자지출과 기타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기타 의무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의무지출은 2022년 342.0조원에서 2031년 516.0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2년 143.1조원에서 2031년 253.8조원까지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9.4%에서 2031년 5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342.0	339.3	356.8	375.3	397.5	419.4	441.6	465.7	489.8	516.0	4.7
(GDP 대비 비율)	(15.8)	(15.0)	(15.1)	(15.2)	(15.5)	(15.8)	(16.0)	(16.3)	(16.6)	(16.9)	
(총지출 대비 비중)	(49.4)	(53.3)	(53.7)	(54.2)	(55.1)	(55.4)	(55.8)	(56.1)	(56.5)	(56.9)	
복지 분야	143.1	153.7	164.7	177.1	189.3	201.5	213.0	226.3	239.3	253.8	6.6
공적연금	62.0	66.6	73.1	80.4	87.2	93.9	99.9	107.6	115.2	124.2	8.0
사회보험	34.1	35.9	38.0	39.9	41.9	44.1	46.4	48.6	50.5	52.5	4.9
공공부조	33.3	37.5	40.1	43.0	46.0	48.8	51.6	54.4	57.2	60.2	6.8
기타	13.7	13.7	13.5	13.7	14.1	14.6	15.1	15.7	16.3	16.9	2.3
지방이전재원	166.7	156.9	162.1	167.0	175.4	183.3	192.0	200.7	209.8	219.3	3.1
이자지출	18.8	21.4	22.6	24.0	25.5	27.1	28.7	30.4	32.3	34.1	6.9
기타 의무지출	13.4	7.3	7.4	7.2	7.3	7.6	7.9	8.2	8.5	8.8	-4.6

주: 2022년 지방이전재원에는 2022년 지방이전재원 정산분(11.2조원)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복지 분야 의무지출

(가) 공적연금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급여지출로, 연금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국민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급여는 해당 급여별 수급자 수에 급여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이때 수급자 수는 코호트 구조를 바탕으로 가입기간 총족률과 수급자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수를 추계하며, 연금수급 개시 시점 이후에는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속수급자 수를 추계한다. 급여별 단가는 성별·가입기간별 소득과 가입기간 등을 활용하여 연금 유형별 산식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단가를 추계한 후 매년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사학연금급여는 퇴직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성되며, 각각의 급여는 해당 급여별 수급자 수에 급여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이때 수급자 수는 성별, 직종별(교원 및 직원)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연금선택률,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급여별 단가는 성별,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연금지급률, 가입기간 등을 적용하여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단가를 추계한 후 매년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공무원연금급여는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로 구성된다. 퇴직자 수는 인사혁신처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수를 전망한 후, 2021년 결산 기준 직종별·성별·재직기간별·연령별 퇴직률과 공무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선택률, 유유족률 등을 활용하여 퇴직급여별 신규 수급자 수를 추계한다. 급여별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2021년 결산 기준 직종별·재직기간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망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상승하고, 퇴직연금, 유족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군인연금급여는 공무원연금과 유사하게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

위금)로 구성된다. 가입자 수는 국방부의 군인 계급별 정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급자 수는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구분하여 추계한다. 기수급자는 2021년 결산 기준 급여별 수급자 수에 국방부의 군인과 유족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신규 수급자는 국방부의 전역 예상 인원에 대한 전망치를 활용한다. 급여별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2021년 결산 기준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망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상승하고, 퇴역연금, 유족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표 1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지출액은 노령연금(조기, 완전, 감액, 특례),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수급자 수에 각 급여유형별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
사학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지출액은 연금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분하고, 수급자 수에 각 급여유형별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
공무원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지출액은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포함), 유족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포함),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전망 ○ 가입자 수는 인사혁신처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전망하고, 퇴직률,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신규 수급자 수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급자 수는 2021년 말 기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공무원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적용하여 전망
군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전환유족연금 포함)과 퇴직수당,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역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 ○ 수급자 수는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기수급자는 국방부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신규 수급자는 국방부의 전역 예상 인원 전망을 활용

전망 결과, 국민연금급여는 2022년 33.5조원에서 2031년 72.6조원으로 연평균 9.0%, 사학연금급여는 2022년 4.8조원에서 2031년 6.8조원으로 연평균 4.1%, 공무원 연금급여는 2022년 20.1조원에서 2031년 39.0조원으로 연평균 7.7%, 군인연금급여는 2022년 3.7조원에서 2031년 5.8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공적연금 의무지출	62.0	66.6	73.1	80.4	87.2	93.9	99.9	107.6	115.2	124.2	8.0
국민연금	33.5	35.1	39.4	43.6	48.3	52.3	55.6	60.6	66.3	72.6	9.0
사학연금	4.8	4.9	5.1	5.3	5.5	5.8	6.0	6.3	6.5	6.8	4.1
공무원연금	20.1	22.7	24.6	27.2	28.6	30.9	33.2	35.4	36.8	39.0	7.7
군인연금	3.7	3.9	4.1	4.4	4.7	4.9	5.1	5.3	5.6	5.8	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회보험

사회보험 의무지출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지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및 공무원·교원의 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보험별 전망 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으로 구성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세부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로 구성된다. 의무지출 사업비는 급여별 수급자 수에 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전망한다. 수급자 수의 경우, 구직급여는 NABO 실업자 수 전망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급여의 단가와 지급기간은 최근 실적치에 근거한다.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산재보험급여로 세부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급여로 구성된다. 산재보험급여는 급여별 수급자 수에 연간 급여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급여별 신규 수급자 수는 산재 적용근로자 수에 재해율, 사망만인을 등을 반영하여 추정하며,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통계청의 일반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급여

단가는 최근 실적치에 근거한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공무원·교원의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된다.¹⁵⁾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일반회계)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하여 추계하되,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율 전망치, 징수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가입자 유형별, 연령군별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중을 곱하여 추계한다.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에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두 가지 제도변화가 반영되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 8. 31., 시행 2022. 9. 1.)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 변화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둘째,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결정됨에 따라(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2. 8. 29.), 이를 반영한 보험료율 증가율을 전망에 반영하였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의 국고지원률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정부지원금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과 공무원·교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금,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에 대한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¹⁶⁾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연동하여 추계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전망치를 곱하여 추계한다.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수급자 증가에 따라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로 인상되고, 수가는 4.7%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15)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1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표 1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별 수급자 수에 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수는 NABO 실업자 수 전망치(구직급여),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모성보호·육아지원) 등에 근거 - 급여의 단가와 지급기간은 최근 실적치에 근거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별 수급자 수에 연간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급자 수는 산재 적용근로자 수에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에 근거(재해율 등은 2021년 수준이 전망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통계청의 일반사망률) 반영 - 급여단가는 최근 실적치에 근거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되며,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율 전망치, 징수율을 곱하여 전망 ○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비율(일반회계)은 각각 최근 3년 평균 인상률과 2023년도 예산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인상률: '22년 1.89%, '23년 1.49%, '24년 이후 2.06%씩 인상(다만,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적용) - 국고지원비율: 2023년도 예산안 비율(12%) 유지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연동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추계는 건강보험료 수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전망과 동일하게 가정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 보험료율(12.81%) 유지 가정 ○ 정부지원 비율은 2022년 이후 보험료 수입 대비 20% 적용

전망 결과,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2022년 13.5조원에서 2031년 18.0조원으로 연평균 3.2%,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2022년 7.1조원에서 2031년 12.0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2년 11.5조원에서 2031년 18.8조원으로 연평균 5.6%,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2022년 2.0조원에서 2031년 3.7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험 의무지출	34.1	35.9	38.0	39.9	41.9	44.1	46.4	48.6	50.5	52.5	4.9
고용보험	13.5	13.7	14.2	14.6	15.0	15.6	16.2	16.8	17.4	18.0	3.2
산재보험	7.1	7.7	8.3	8.9	9.4	10.0	10.5	11.0	11.5	12.0	6.0
건강보험	11.5	12.2	13.0	13.8	14.6	15.5	16.5	17.4	18.1	18.8	5.6
노인장기요양보험	2.0	2.3	2.4	2.6	2.8	3.0	3.2	3.4	3.6	3.7	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의무지출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의무지출은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과거 실적치와 거시·인구변수 등을 활용하여 급여항목별 대상자 수 또는 대상 가구 수를 추정한 후, 급여항목별 단가와 국고 보조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데, 기준연금액은 2022년 기준 월 307,500원이다. 기초연금은 유형별 수급자 수에 유형별 1인당 평균 수급액을 곱하여 추계한다. 유형별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전체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전액 및 감액수급자 비중, 단독 및 부부 수급자 비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유형별 1인당 평균 수급액은 부부 수급자 감액률,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률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장애수당(기초)은 18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이 아닌 장애인(중전 3~6급)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장애수당은 유형별 수급자 수에 유형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유형은 재가 수급 장애인과 시설급여 수급 장애인으로 나뉜다.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18세 이상 인구에 장애발생률과 수급자 비율을 적용한 후, 재가 급여 수급 장애인 비율과 시설급여 수급 장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유형별 단가는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전 1,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연령집단별·유형별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애인구추계의 18세 이상 인구에 중증장애인 비율과 수급자 비율을 적용한 후, 연령집단별·유형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이때 연령집단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며, 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재가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시설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특례 등으로 구분된다. 급여 단가는 기초급여의 경우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하되, 부부 수급자에게는 감액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급여의 경우 급여 단가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표 2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 및 시설수급자 수에 연간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 ○ (의료급여) 종별(1종, 2종,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수에 연간 종별 단가를 곱하여 추계 ○ (교육급여) 통계청의 장애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에 급여항목별·학교급별 수급자 비율을 곱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 ○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수급자 수에 급여비 단가와 수급률을 곱하여 추산 ○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전액, 부부감액, 국민연금감액, 소득감액 등) 수급자 수에 평균 수급액을 적용하여 추계
장애수당(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재가·시설) 수급자 수에 유형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장애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집단별·유형별(재가, 시설, 차상위, 차상위 초과, 특례 등) 수급자 수에 각각의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전망 결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2년 16.2조원에서 2031년 27.9조원으로 연평균 6.2%, 기초연금은 2022년 16.1조원에서 2031년 31.1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수당(기초)는 2022년 0.1조원에서 2031년 0.2조원으로 연평균 7.3%, 장애인연금은 2022년 0.8조원에서 2031년 1.0조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이다.

[표 21]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공공부조 의무지출	33.3	37.5	40.1	43.0	46.0	48.8	51.6	54.4	57.2	60.2	6.8
기초생활보장 급여	16.2	18.1	19.0	20.2	21.4	22.7	23.9	25.2	26.4	27.9	6.2
기초연금	16.1	18.4	20.0	21.7	23.5	25.0	26.6	28.0	29.6	31.1	7.6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2	0.2	0.2	0.2	0.2	0.2	7.3
장애인연금	0.8	0.9	0.9	0.9	0.9	0.9	1.0	1.0	1.0	1.0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기타 복지지출

기타 복지지출은 보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보철구지급,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보상금과 수당은 대상·혼격·급수별로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¹⁷⁾ 추정된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¹⁸⁾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대상자 및 단가는 장기추계모형¹⁹⁾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대상자 수의 경우 시계열 분석 모형(ARIMA)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지원단가 및 지급개월은 전망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무지출 사업으로 2023년부터 보훈 분야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0~2세 반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연장보육료 등으로 구성된다. 영유아보육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영유아 수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지원하

17) 보상금별 대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측 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의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18) 이때, 보상금 및 수당 단가의 인상률은 정책변수로서 불가상승률과 연동하지 않으며,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은 최근 5년 간 평균인상률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2023년에 각각 3만원씩 인상되었고, 이후는 최근 5년 간 평균 인상률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9)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대상자 및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2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연구」의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지 않는 어린이집의 이용률 등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를 연령별·시설유형별로 각각 추정한 후 1인당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2023년도부터는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0세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예산의 일부가 2023년에, 1세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예산의 일부가 2024년에 각각 부모급여 예산으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1인당 지원단가인 월 10만원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보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을 제외한 기타 복지지출은 해당금 지급,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7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2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과 수당은 대상·훈격·급수별로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추정된 단가를 곱하여 전망 ◦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대상자 및 단가는 장기추계모형 적용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대상자는 시계열 분석 모형(ARIMA) 적용, 단가 및 지급개월은 동일하게 유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보훈 분야 의무지출에 포함
영유아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 수에 인건비 지원 시설 및 미지원 시설 이용률 등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를 연령별·시설유형별로 각각 추정 ◦ 연령별·시설유형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에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 추정 ◦ 수급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인 월 10만원을 적용하여 추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7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전망 결과,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2022년 5.0조원에서 2031년 6.8조원으로 연평균 3.4%, 영유아보육료는 2022년 3.2조원에서 2031년 3.4조원으로 0.6% 증가하나, 아동수당은 2022년 2.4조원에서 2031년에 1.9조원으로 연평균 2.5% 감소할 전망이다.

[표 23]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기타 복지지출	13.7	13.7	13.5	13.7	14.1	14.6	15.1	15.7	16.3	16.9	2.3
보훈	5.0	5.2	5.4	5.6	5.7	6.0	6.2	6.4	6.6	6.8	3.4
영유아보육료	3.2	2.9	2.5	2.4	2.5	2.6	2.8	3.0	3.2	3.4	0.6
아동수당	2.4	2.3	2.1	2.0	1.9	1.8	1.8	1.8	1.9	1.9	-2.5
기타	3.1	3.4	3.6	3.8	4.0	4.2	4.4	4.5	4.7	4.8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방이전재원

의무지출 성격의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²⁰⁾로 한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으로 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나, 정부는 법 개정을 전제로 2024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한다.

20) 이때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 참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대상 고등학생 수에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 때 지원대상 고등학생 수는 취학 적령 인구 대비 지원인원 비율 실적치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취학 적령 인구에 곱하여 추정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1년 결산에 따른 1인당 교육비 실적치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표 2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교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의 경우 202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포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의 경우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포함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 ○ (2025~2031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로 지출 미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중 교육세 지원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4년) 지원대상 고등학생 수에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추계 ○ (2025~203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증액 교부하는데, 2025년부터는 증액교부금 규정이 일몰되어 지출 미발생

전망 결과, 지방교부세는 2022년 81.1조원에서 2031년 106.6조원으로 연평균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80.9조원에서 2031년 112.7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¹⁾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원근거 법률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만 전망한다.

2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2년 전망치에는 2022년 4월에 있었던 지방교부세 등의 정산분(11.2조원)을 포함하였다.

[표 25]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166.7	156.9	162.1	167.0	175.4	183.3	192.0	200.7	209.8	219.3	3.1
지방교부세	81.1	75.2	77.7	81.4	85.6	89.4	93.7	97.8	102.1	106.6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9	77.2	80.2	85.6	89.8	93.9	98.3	102.9	107.7	112.7	3.8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	3.5	3.2	-	-	-	-	-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0	1.0	1.0	-	-	-	-	-	-	-	

주: 2022년 지방이전재원에는 2022년 지방이전재원 정산분(11.2조원)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기타 이자지출로 구성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기발행 국고채의 이자지출과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지출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신규 발생 국고채는 관리재정수지 전망치의 일정비율로 추정하는데, 동 비율은 2022~2026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비율로 하며 2027년 이후는 100%로 가정한다.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를 적용하는데, NABO 국고채 금리(3년 만기)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지출은 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의 발행금액²²⁾과 5년 만기 시의 이자율에 대한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이자지출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채권과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며, 2027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행 금액과 이자율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기타 이자지출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 청약저축 이자지급,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구분된다.²³⁾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22) 국민주택채권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 채권(5년 만기)의 발행규모가 전체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의 99.9%를 차지한다.

23) 그밖에 기타 이자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있는데,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7년 이후는 2026년 금액과 동일하게 가정한다.

지출은 우체국예금 수신고와 조달금리를 각각 전망한 후 각 전망값을 곱하여 전망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우체국예금 수신고와 조달금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신고 및 조달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수신고 및 조달금리가 수준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청약저축 이자지급은 청약저축 상환액과 이자율을 각각 전망한 후 각 전망값을 곱하여 추정한다. 청약저축 상환액은 청약저축 연말 잔액을 가구 수와의 회귀모형을 이용해서 추계한 후 평균 상환율(2017~2021년)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자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2년부터 2026년 이자율이 2026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상환 계획에 따른 소요자금과 이자지급율을 각각 전망한 후, 각 전망값을 곱하여 추계한다. 소요자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2년부터 2026년 금액을 회귀모형을 이용해서 추계하고, 이자지급률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균 이자지급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2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고채 이자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채 잔액은 기발행 국고채와 신규발행 국고채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 시점 보유 국고채는 기발행 국고채로 분류 - 신규 발행 국고채는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전망치의 일정비율로 발행한다고 가정(2023년 79.1%, 2024년 90.7%, 2025년 99.1%, 2026년 104.8%, 2027년 이후는 100% 가정) ○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는 NABO 국고채금리(3년 만기)에 근거하여 추정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6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및 해당 이자율에 따라 전망 ○ (2027~203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및 이자율 반영
기타 이자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우체국예금 수신고와 조달금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수신고와 조달금리 적용 ○ (청약저축 이자지급) 청약저축 상환액은 청약저축 연말 잔액을 가구 수와의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소요자금은 2022년부터 2026년 금액의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전망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2022년 15.7조원에서 2031년 30.2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이자지출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누적과 높은 국고채 이자율 수준으로 인해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지출은 2022년 1.2조원에서 2031년 0.9조원으로 연평균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이자지출은 2022년 1.9조원에서 2031년 3.0조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이자지출	18.8	21.4	22.6	24.0	25.5	27.1	28.7	30.4	32.3	34.1	6.9
국고채 이자지출	15.7	17.7	19.1	20.5	21.9	23.4	25.0	26.6	28.4	30.2	7.6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1.2	1.4	1.1	1.0	1.0	0.9	0.9	0.9	0.9	0.9	-3.2
기타	1.9	2.3	2.5	2.6	2.6	2.7	2.8	2.9	3.0	3.0	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의무지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익기능증진 직불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2027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2022년 13.4조원에서 2031년 8.8조원으로 연평균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4.0조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면 2.3% 수준이다.

[표 28]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기타 의무지출	13.4	7.3	7.4	7.2	7.3	7.6	7.9	8.2	8.5	8.8	-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022년 추경(2회)의 재량지출은 349.8조원으로 GDP 대비 16.1% 수준이며, 2023년 재량지출은 297.3조원(GDP 대비 13.1%), 2024년 307.9조원(13.0%), 2025년 316.7조원(12.9%), 2026년 323.6조원(12.6%)으로 계획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기간 이후인 2027년부터는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하여 2031년에 장기수립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장기수립 수준은 정부가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최근 2023년 예산안까지의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으로 한다.²⁴⁾

[표 2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 (2027~2031년) GDP 대비 비율이 2031년에 장기수립 수준에 이르도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수립 수준은 2012~2023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으로 가정

전망 결과, 재량지출은 2022년 349.8조원에서 2031년 391.6조원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45.3조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면 3.5% 수준이다. 그리고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0.6%에서 2031년 43.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2022. 9.)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전망하였다.

[표 30]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349.8	297.3	307.9	316.7	323.6	337.0	350.3	363.8	377.4	391.6	1.3
(GDP 대비 비율)	(16.1)	(13.1)	(13.0)	(12.9)	(12.6)	(12.7)	(12.7)	(12.7)	(12.8)	(12.8)	
(총지출 대비 비중)	(50.6)	(46.7)	(46.3)	(45.8)	(44.9)	(44.6)	(44.2)	(43.9)	(43.5)	(4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재정수지 전망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68.6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3.2\%$), 2023년 14.0조원 적자($\Delta 0.6\%$), 2031년 50.0조원 적자($\Delta 1.6\%$)로 전망된다. 2023년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0.1% 감소하나, 총지출은 재량지출 감축 등으로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된다. 2024년 이후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적자 규모가 증가한다.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8.1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5.4\%$), 2023년 58.2조원 적자($\Delta 2.6\%$), 2031년 76.8조원 적자($\Delta 2.5\%$)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이후 $\Delta 2.6\sim\Delta 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2022년 49.5조원(GDP 대비 2.3%)에서 2031년 26.8조원(0.9%)으로 전망되는데,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여금 수입 감소 및 급여지출 증가 등으로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중기재경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통합재정수지	-68.6	-14.0	-17.1	-18.1	-17.9	-24.4	-29.9	-35.5	-43.8	-50.0
(GDP 대비 비율)	(-3.2)	(-0.6)	(-0.7)	(-0.7)	(-0.7)	(-0.9)	(-1.1)	(-1.2)	(-1.5)	(-1.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5	44.2	42.8	41.7	39.9	38.2	37.5	34.7	31.2	26.8
(GDP 대비 비율)	(2.3)	(1.9)	(1.8)	(1.7)	(1.6)	(1.4)	(1.4)	(1.2)	(1.1)	(0.9)
관리재정수지	-118.1	-58.2	-59.8	-59.8	-57.8	-62.6	-67.3	-70.3	-75.0	-76.8
(GDP 대비 비율)	(-5.4)	(-2.6)	(-2.5)	(-2.4)	(-2.3)	(-2.4)	(-2.4)	(-2.5)	(-2.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 관리재정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전망

□ 국민연금

- 국민연금기금수지는 2022년 51.6조원 흑자에서 2031년 25.4조원 흑자로 전망기간 동안 흑자 규모 감소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	86.0	79.6	82.3	84.8	87.4	89.7	92.3	94.6	96.9	99.1	1.6
지출	34.4	36.0	40.3	44.5	49.2	53.3	56.6	61.6	67.3	73.6	8.8
수지	51.6	43.6	42.0	40.3	38.1	36.4	35.7	33.1	29.6	25.4	
적립금	926.3	974.8	1,032.5	1,102.9	1,173.8	1,245.8	1,320.0	1,394.5	1,468.5	1,526.0	5.7
(GDP 대비)	(42.7)	(43.0)	(43.6)	(44.8)	(45.9)	(46.8)	(47.9)	(48.8)	(49.7)	(49.9)	

주: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학연금

- 사학연금기금수지는 2022년 0.3조원 흑자에서 2025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1.1조원 적자 전망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	6.0	5.9	6.0	6.0	6.1	6.2	6.3	6.4	6.4	6.5	0.9
지출	5.7	5.8	5.9	6.1	6.4	6.6	6.8	7.0	7.3	7.6	3.2
수지	0.3	0.0	0.0	-0.1	-0.2	-0.4	-0.6	-0.7	-0.9	-1.1	
적립금	25.0	25.9	26.9	28.3	29.4	30.4	31.3	32.0	32.6	32.9	3.1

주: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기금수지는 2022년 3.0조원 적자에서 2031년 9.9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증가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	19.2	19.8	20.7	21.6	22.2	24.1	26.1	28.2	29.1	31.3	5.6
지출	22.2	24.5	26.3	28.9	30.2	32.6	35.0	37.3	38.8	41.1	7.1
수지	-3.0	-4.7	-5.6	-7.3	-8.0	-8.5	-8.9	-9.1	-9.7	-9.9	
적립금	16.0	17.0	17.8	18.6	19.5	20.4	21.3	22.3	23.4	24.4	4.8

- 주: 1.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2. 공무원연금의 연금재정운영방식은 부과방식이고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금을 보유 중이며, 국민연금의 적립금과 기능, 역할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군인연금

- 군인연금기금수지는 2022년 2.9조원 적자에서 2031년 4.9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증가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	0.7	0.8	0.8	0.8	0.9	0.9	0.9	0.9	0.9	0.9	2.1
지출	3.7	3.9	4.1	4.4	4.7	4.9	5.1	5.3	5.6	5.8	5.2
수지	-2.9	-3.1	-3.2	-3.5	-3.9	-4.1	-4.3	-4.5	-4.7	-4.9	
적립금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2.9

- 주: 1.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2. 군인연금의 연금재정운영방식은 부과방식이고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금을 보유 중이며, 국민연금의 적립금과 기능, 역할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금수지는 2022년 2.5조원 적자에서 2023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2031년 2.5조원 흑자 전망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	16.0	17.6	18.2	19.0	19.9	20.8	21.7	22.5	23.5	24.3	4.7
지출	18.5	17.0	17.4	17.7	18.2	19.0	19.7	20.4	21.1	21.8	1.8
수지	-2.5	0.7	0.8	1.3	1.7	1.8	2.0	2.2	2.4	2.5	
적립금	5.3	6.0	6.9	8.3	10.1	12.1	14.2	16.6	14.4	11.6	9.2

주: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산재보험

- 산재보험기금수지는 2022년 0.1조원 흑자에서 2031년 0.01조원 흑자로 전망기간 동안 흑자 규모 감소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	8.9	9.6	10.2	10.9	11.6	12.1	12.6	13.1	13.6	14.0	5.2
지출	8.8	9.6	10.3	10.7	11.2	11.7	12.3	12.9	13.5	14.0	5.3
수지	0.1	0.0	0.0	0.2	0.4	0.4	0.3	0.2	0.1	0.0	
적립금	22.4	22.5	22.5	22.8	23.3	23.7	24.0	24.2	24.4	24.4	1.0

주: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건강보험

- 건강보험수지는 2022년 0.05조원 적자에서 2031년 13.6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증가
 -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 9.)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29년) 등에 따른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 지속

중기재정전망: 건강보험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	86.2	90.8	97.8	104.9	112.7	120.6	129.0	137.6	143.8	150.1	6.4
지출	86.2	93.2	98.3	106.5	115.2	124.5	132.6	143.0	152.1	163.7	7.4
수지	0.0	-2.5	-0.5	-1.5	-2.5	-3.9	-3.6	-5.4	-8.3	-13.6	
적립금	20.2	17.7	17.3	15.7	13.3	9.3	5.7	0.2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는 2022년 0.4조원 흑자에서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5.2조원 적자 전망
 -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29년) 및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폭 감소*에 따른 수입 증가분 감소

*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4.4% 인상(2021년 6.5%)

중기재정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	13.3	14.7	15.9	17.1	18.4	19.8	21.2	22.7	23.9	25.1	7.3
지출	12.9	14.4	16.1	17.8	19.6	21.5	23.3	25.3	27.9	30.3	9.9
수지	0.4	0.2	-0.2	-0.7	-1.2	-1.8	-2.1	-2.7	-4.1	-5.2	
적립금	2.1	2.4	2.2	1.5	0.3	-	-	-	-	-	

5. 국가채무 전망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²⁵⁾로 구분할 수 있고,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상환 등이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의미하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있다.

총수입·총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규모를 추정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제외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그리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2~2026년 기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하게 전망하며, 2027년 이후는 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²⁶⁾

[표 3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자성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적자보전) 관리재정수지의 일정 비율*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대비 적자성 국채 증가분의 비율(2023년 79.1%, 2024년 90.7%, 2025년 99.1%, 2026년 104.8%, 2027년 이후는 100% 가정) -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2027년 이후는 2026년 수준 유지 ○ (금융성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2027년 이후는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 ○ (지방정부 순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2027년 이후는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

25)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잔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6) 다만, 적자성 채무 중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은 2026년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채무 비율은 9.2%p 증가).²⁷⁾ 중앙정부 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2022년 647.1조원(GDP 대비 29.8%)에서 2031년 1,185.1조원(38.7%)으로 연평균 7.0%, 금융성 채무는 2022년 390.6조원(GDP 대비 18.0%)에서 2031년 571.0조원(18.7%)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2년 31.1조원(GDP 대비 1.4%)에서 2031년 33.4조원(1.1%)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전망이다.

[표 33]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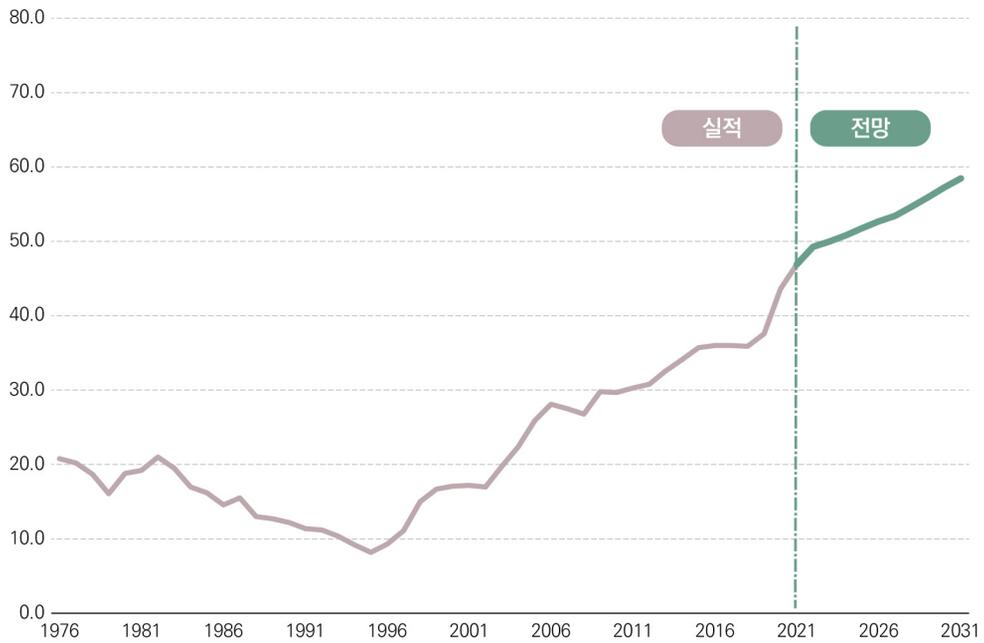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A+B)	1,068.8	1,134.8	1,202.4	1,275.5	1,348.8	1,420.9	1,507.7	1,597.6	1,692.3	1,789.6	5.9
(GDP 대비 비율)	(49.3)	(50.0)	(50.8)	(51.8)	(52.7)	(53.4)	(54.7)	(55.9)	(57.2)	(58.5)	
중앙정부 채무(A)	1,037.7	1,102.2	1,170.7	1,245.2	1,320.8	1,391.8	1,477.6	1,566.4	1,660.0	1,756.2	6.0
(GDP 대비 비율)	(47.8)	(48.6)	(49.5)	(50.5)	(51.6)	(52.3)	(53.6)	(54.8)	(56.1)	(57.4)	
적자성 채무	647.1	688.9	738.0	789.8	843.1	895.5	962.9	1,033.2	1,108.3	1,185.1	7.0
(GDP 대비 비율)	(29.8)	(30.4)	(31.2)	(32.1)	(32.9)	(33.7)	(34.9)	(36.2)	(37.5)	(38.7)	
금융성 채무	390.6	413.3	432.7	455.4	477.7	496.3	514.7	533.1	551.8	571.0	4.3
(GDP 대비 비율)	(18.0)	(18.2)	(18.3)	(18.5)	(18.7)	(18.7)	(18.7)	(18.7)	(18.7)	(18.7)	
지방정부 순채무(B)	31.1	32.6	31.7	30.3	28.0	29.1	30.1	31.2	32.3	33.4	0.8
(GDP 대비 비율)	(1.4)	(1.4)	(1.3)	(1.2)	(1.1)	(1.1)	(1.1)	(1.1)	(1.1)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7) 2012~2021년 기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2년 30.8%에서 2021년 46.9%로 16.1%p 증가하였다.

[그림 3]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Ⅲ.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비교한다. 이때 기준전망은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 시점(2022. 9. 2.)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전망치이다.

기준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기재정전망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먼저 국세수입의 경우 정부 세법개정안은 주로 세수를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장려세제 지급액 인상 등,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으며, 기타 세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이 있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주요 정책 변화로는 국유재산 매각 계획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증가 등이 있다.

[표 34]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주요 정책 변화
국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등 ○ (법인세) 세율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등 ○ (기타 세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국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유물매각대) 국유재산 매각 계획 확대 ○ (경상이전수입) 전기요금 인상

총지출의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의무지출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재산기준 완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등이 있다. 재량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며, 기준전망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므로 두 계획 간의 금액 차이를 정책 변화(재정운용의 기초 변화)로 가정한다.

[표 35]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주요 정책 변화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생계급여) 지역구분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 ○ (의료급여) 지역구분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신설 ○ (아동수당) 국고보조율 인상 ○ (보훈) 위탁병원 이용자의 기준 연령 폐지 등 ○ (장애수당(기초)) 급여단가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효기간 연장 																					
재량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전망)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전망)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2025년 금액 반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조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2024</th> <th>2025</th> <th>2026</th> </tr> </thead> <tbody> <tr> <td>2022~2026년 계획</td> <td></td> <td>349.8</td> <td>297.3</td> <td>307.9</td> <td>316.7</td> <td>323.6</td> </tr> <tr> <td>2021~2025년 계획</td> <td>325.8</td> <td>303.3</td> <td>323.0</td> <td>336.2</td> <td>348.4</td> <td></td> </tr> </tbody> </table> <p>주: 2022~2026년 계획의 2022년은 추정(2회), 2021~2025년 계획의 2021년은 추정(2회) 기준</p>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년 계획		349.8	297.3	307.9	316.7	323.6	2021~2025년 계획	325.8	303.3	323.0	336.2	348.4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년 계획		349.8	297.3	307.9	316.7	323.6																
2021~2025년 계획	325.8	303.3	323.0	336.2	348.4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가. 개 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의 결과를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한다.

기준전망의 주요 재정총량의 전망 결과를 보면,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 (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74.6조원(GDP 대비 28.6%)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15.8조원(GDP 대비 29.9%)으로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3.2%에서 2031년 △1.3%로 전망되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5.4%에서 2031년 △2.2%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886.9조원 (61.7%)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 기준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23.2	627.8	661.9	688.9	718.1	747.4	777.8	810.1	840.0	874.6	3.8
(GDP 대비 비율)	(28.7)	(27.7)	(28.0)	(28.0)	(28.1)	(28.1)	(28.2)	(28.4)	(28.4)	(28.6)	
국세수입	394.9	406.3	429.0	449.0	470.5	491.1	513.9	537.0	561.0	586.1	4.5
(전년 대비 증가율)	(14.8)	(2.9)	(5.6)	(4.7)	(4.8)	(4.4)	(4.6)	(4.5)	(4.5)	(4.5)	
국세외수입	228.3	221.5	232.9	239.9	247.7	256.2	263.9	273.1	279.1	288.4	2.6
(전년 대비 증가율)	(0.9)	(-3.0)	(5.1)	(3.0)	(3.3)	(3.5)	(3.0)	(3.5)	(2.2)	(3.4)	
총지출	691.8	662.5	698.0	731.1	760.5	789.6	818.0	847.6	876.6	915.8	3.2
(GDP 대비 비율)	(31.9)	(29.2)	(29.5)	(29.7)	(29.7)	(29.7)	(29.7)	(29.7)	(29.6)	(29.9)	
의무지출	342.0	339.5	361.8	382.7	405.6	428.1	450.8	475.0	499.1	525.1	4.9
(전년 대비 증가율)	(22.4)	(-0.7)	(6.6)	(5.8)	(6.0)	(5.6)	(5.3)	(5.4)	(5.1)	(5.2)	
재량지출	349.8	323.0	336.2	348.4	354.9	361.4	367.2	372.6	377.5	390.7	1.2
(전년 대비 증가율)	(9.7)	(-7.7)	(4.1)	(3.6)	(1.9)	(1.8)	(1.6)	(1.5)	(1.3)	(3.5)	
통합재정수지	-68.6	-34.7	-36.1	-42.2	-42.3	-42.2	-40.2	-37.5	-36.6	-41.3	
(GDP 대비 비율)	(-3.2)	(-1.5)	(-1.5)	(-1.7)	(-1.7)	(-1.6)	(-1.5)	(-1.3)	(-1.2)	(-1.3)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5	44.2	42.8	41.7	39.9	38.2	37.5	34.7	31.2	26.8	
(GDP 대비 비율)	(2.3)	(1.9)	(1.8)	(1.7)	(1.6)	(1.4)	(1.4)	(1.2)	(1.1)	(0.9)	
관리재정수지	-118.1	-78.9	-78.9	-83.9	-82.3	-80.4	-77.7	-72.2	-67.8	-68.1	
(GDP 대비 비율)	(-5.4)	(-3.5)	(-3.3)	(-3.4)	(-3.2)	(-3.0)	(-2.8)	(-2.5)	(-2.3)	(-2.2)	
국가채무	1,068.8	1,151.1	1,236.0	1,333.0	1,431.9	1,521.8	1,618.9	1,710.8	1,798.3	1,886.9	6.5
(GDP 대비 비율)	(49.3)	(50.7)	(52.2)	(54.1)	(55.9)	(57.2)	(58.7)	(59.9)	(60.8)	(61.7)	

주: 2022년 의무지출에는 2022년 지방이전채원 정산분(11.2조원)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총수입

(1) 개관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5.2~17.0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총 130.3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기준전망 대비 총 145.9조원 감소하나,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유재산 매각 확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증가로 총 15.6조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표 3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총수입	623.2	622.6	647.7	673.9	703.2	732.0	762.0	794.0	823.4	857.6	3.6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474.0	496.3	519.0	542.6	567.3	4.1
국세외수입	228.3	223.1	234.5	241.5	249.4	258.0	265.7	274.9	280.9	290.3	2.7
기준전망(B)											
총수입	623.2	627.8	661.9	688.9	718.1	747.4	777.8	810.1	840.0	874.6	3.8
국세수입	394.9	406.3	429.0	449.0	470.5	491.1	513.9	537.0	561.0	586.1	4.5
국세외수입	228.3	221.5	232.9	239.9	247.7	256.2	263.9	273.1	279.1	288.4	2.6
차 이(A-B)											합계
총수입	0.0	-5.2	-14.2	-15.0	-15.0	-15.4	-15.8	-16.2	-16.6	-17.0	-130.3
국세수입	0.0	-6.9	-15.9	-16.6	-16.7	-17.1	-17.5	-18.0	-18.4	-18.8	-145.9
국세외수입	0.0	1.6	1.7	1.7	1.7	1.7	1.8	1.8	1.8	1.8	1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세수입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연도별로 6.9~18.8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145.9조원 낮다. 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책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세법개정안은 주로 세수를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장려세제 지급액 인상 등,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으며, 기타 세목은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이 있다.

[표 3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국세수입	0.0	-6.9	-15.9	-16.6	-16.7	-17.1	-17.5	-18.0	-18.4	-18.8	-145.9
소득세	0.0	-3.5	-5.1	-3.9	-3.3	-3.4	-3.4	-3.5	-3.6	-3.6	-33.4
법인세	0.0	-0.5	-7.3	-7.8	-8.3	-8.5	-8.8	-9.1	-9.4	-9.7	-69.3
부가가치세	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7
기타 세목	0.0	-2.8	-3.5	-5.0	-5.1	-5.2	-5.3	-5.3	-5.4	-5.5	-43.1

주: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3.3~5.1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33.4조원 낮다. 이는 중기재정전망에 정부 세법개정
 안에 따라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근로
 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퇴직
 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등의 세수효과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표 3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구분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의 기준금액 확대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자의 재산요건 완화 및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10% 인상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근로소득자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상향(30/50/80/120만원 → 100/200/250/300만원)

법인세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0.5~9.7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69.3조원 낮다. 이는 중기재정전망에 2023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2023년의 경우 △0.5조원 세수 차이가 발생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4년에는 △7.3조원으로 차이가 확대된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는 법인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전망과 차이가 커진다.

[표 40]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세율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4단계의 세율구간을 2단계(중소·중견 3단계)로 축소 - 과표 2억원 이하 구간(10%) 및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25%)의 세율 삭제(단,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 2023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의 일부를 투자·고용·상생협력에 미환류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기한(2022년 12월 31일)을 연장하지 않고 일몰 종료 ○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공제율 2%p 상향 - (중견기업)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공제율 1~2%p 상향

기타 세목은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2.8~5.5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43.1조원 낮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41]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 → 보유주택수에 관계 없이 0.5~2.7% -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 세부담 상한 비율: (3주택 이상) 300% → 150% ○ 증권거래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코스피) 0.08% → '23년 0.05% → '25년 0% <li style="padding-left: 40px;">(코스닥) 0.23% → '23년 0.20% → '25년 0.15%

(3)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1.6~1.8조원 높으며, 10년 동안 15.6조원 높다. 이는 국유재산 매각 확대 계획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2017~2021년 총 10.4조원 수준인데 2023~2027년 총 16조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관유물매각대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상이전수입(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증가가 예상된다.

[표 4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국세외수입	0.0	1.6	1.7	1.7	1.7	1.7	1.8	1.8	1.8	1.8	15.6

주: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3] 주요 정책 변화: 국세의수입

구 분	주요 정책 변화
국세의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유물매각대)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기획재정부, 2022. 8.)의 유희·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계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매각 규모를 2017~2021년 총 10.4조원 수준에서 2023~2027년 연간 3.2조원, 총 16조원 수준으로 확대 ○ (경상이전수입)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의 전기요금 판매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전기요금 판매단가 인상 (108원/KWh → 126.4원/KWh)

다. 총지출

(1) 개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8.3~39.4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총 232.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재량지출에서 비롯되는데, 중기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으나 기준전망에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에 따라 재량지출 감축 계획을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것이다.

[표 44]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총지출	691.8	636.6	664.8	692.0	721.1	756.4	791.9	829.5	867.2	907.6	3.1
의무지출	342.0	339.3	356.8	375.3	397.5	419.4	441.6	465.7	489.8	516.0	4.7
재량지출	349.8	297.3	307.9	316.7	323.6	337.0	350.3	363.8	377.4	391.6	1.3
기준전망(B)											
총지출	691.8	662.5	698.0	731.1	760.5	789.6	818.0	847.6	876.6	915.8	3.2
의무지출	342.0	339.5	361.8	382.7	405.6	428.1	450.8	475.0	499.1	525.1	4.9
재량지출	349.8	323.0	336.2	348.4	354.9	361.4	367.2	372.6	377.5	390.7	1.2
차 이(A-B)											합계
총지출	0.0	-25.9	-33.2	-39.1	-39.4	-33.2	-26.1	-18.2	-9.4	-8.3	-232.7
의무지출	0.0	-0.2	-5.0	-7.4	-8.1	-8.7	-9.2	-9.4	-9.3	-9.1	-66.4
재량지출	0.0	-25.7	-28.3	-31.7	-31.3	-24.4	-16.9	-8.8	-0.1	0.9	-166.4

주: 2022년 지방이전재원에는 2022년 지방이전재원 정산분(11.2조원)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의무지출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은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연도별로 0.2~9.4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총 66.4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이 달라지는 주요 이유는 의무지출 분야에 따라 다른데,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 10년 동안 19.1조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재원은 정부세법개정안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10년 동안 65.8조원 낮고, 이자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중기재정전망의 지출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10년 동안 19.7조원 낮다.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결과가 동일하다.²⁸⁾

28)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 등에 정책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전망을 중기재정전망과 동일하게 가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표 45]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의무지출	0.0	-0.2	-5.0	-7.4	-8.1	-8.7	-9.2	-9.4	-9.3	-9.1	-66.4
복지 분야	0.0	1.8	1.7	1.9	2.0	2.1	2.2	2.3	2.4	2.5	19.1
건강보험	0.0	0.8	0.8	0.9	1.0	1.0	1.1	1.2	1.2	1.3	9.4
기초생활보장	0.0	0.6	0.7	0.7	0.7	0.7	0.8	0.8	0.8	0.8	6.5
기초연금	0.0	0.5	0.6	0.6	0.7	0.7	0.8	0.8	0.9	0.9	6.6
장애수당(기초)	0.0	0.0	0.1	0.1	0.1	0.1	0.1	0.1	0.1	0.1	0.6
영유아보육료	0.0	-0.2	-0.5	-0.5	-0.5	-0.5	-0.6	-0.6	-0.6	-0.7	-4.6
지방이전재원	0.0	-1.8	-5.9	-7.9	-7.9	-8.1	-8.3	-8.5	-8.6	-8.8	-65.8
이자지출	0.0	-0.3	-0.8	-1.4	-2.1	-2.7	-3.1	-3.2	-3.1	-2.8	-19.7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복지 분야의 하위 항목은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의무지출에 한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항목별로 보면, 먼저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9.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예산안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 비율이 증가하여 이를 전망에 반영한 결과이다.

[표 46]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주요 정책 변화
건강보험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수입액의 11%* → 예상 수입액의 12%(2023년도 예산안) * 실국고지원율 기준(2019~2021년 평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6.5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3.2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등의 상향 계획에 따른 급여 대상자 수와 생계급여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7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되는데, 이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공제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을 개편하고, 공제액의 한도액을 상향함에 따른 수급자 수 확대를 반영한 결과이다. 교육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2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2.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2. 7. 29.)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로 심의·의결되고, 기준임대료를 시장 임대료 상승분을 고려하여 현실화한 것에 기인한다.

기초연금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6.6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022년 307,500원에서 2023년 321,950원으로 4.7% 인상되는 계획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수당(기초)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0.6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도 예산안에 인상된 장애수당 급여 단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수당 단가는 현행 재가수급 장애인 4만원, 시설수급 장애인 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는 재가수급 장애인 6만원, 시설수급 장애인 3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2023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구분	주요 정책 변화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지역구분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분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등 상향 조정)**에 따른 대상자 및 급여액 증가 * 현행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 세종, 창원/기타)로 변경(주거비의 지역별 차이 고려) ** 재산액 산정 시 공제하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 상향(3,800만원~1억 2,000만원 → 1억 1,200만원~1억 7,200만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2,900만원~6,900만원 → 5,300만원~9,900만원) -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83.13% → 83.06%) ○ (의료급여) 지역구분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분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등 상향 조정)**에 따른 대상자 및 급여액 증가 * 생계급여와 동일 ** 재산액 산정 시 공제하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 상향(3,800만원~1억원 → 1억 1,200만원~1억 7,200만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2,900만원~5,400만원 → 5,300만원~9,900만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 * (초) 331→415천원, (중) 466→589천원, (고) 554→654천원 -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83.13% → 83.06%) ○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307,500원 → 2023년 321,950원(2023년도 예산안 기준)
장애수당(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단가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단가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2023년도 예산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2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기준연령 폐지에 따른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진료비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영유아보육료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4.6조원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도 예산안에 부모급여²⁹⁾의 도입으로 0~1세 영유아에 대한 급여 지원 예산이 부모급여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부터는 0세반, 2024년도부터는 1세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예산의 일부가 각각 부모급여 예산으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아동수당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5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고보조율이 2022년 73.6%에서 2023년 예산안에 75.6%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29)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현금급여로 기존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며, 지원단가는 2023년에 월 70만원(0세)/월 35만원(1세)이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0세)/월 50만원(1세)으로 인상될 예정이다(기존 영아수당 단가 인상 계획, 2022년 30만원 → 2023년 35만원 → 2024년 40만원 → 2025년 50만원. 부모급여 지원에 따른 지원단가 상향을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개정 필요).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부모급여는 의무지출로 분류되지 않으나, 부모급여가 타 의무지출 사업(영유아보육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소요액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부모급여	0.3	1.7	2.3	2.3	2.4	2.6	2.7	2.8	2.9	3.0	28.2

[표 48] 주요 정책 변화: 기타 복지지출

주요 정책 변화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병원진료) 위탁병원 이용자의 기준 연령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중에서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한한 연령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75세 미만인 자가 추가로 포함되어 위탁병원 진료비 증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 2022. 9. 6.) ○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내역사업인 장제보조비(2023년 예산안 4 억원)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재량사업)’으로 이관되어 의무지출에서 제외
영유아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1세반 영유아 보육료 예산 일부가 부모급여 예산(2023년 신설)으로 통합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0~1세 영유아에 대한 급여 지원이 부모 급여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 * 만 0~1세의 보육 비용을 부모급여로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중 선택 하여 이용하도록 함 - 2023년부터는 0세반, 2024년부터는 1세반 보육료 예산 일부가 부모급여 예산으로 통합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율 인상(2022년 73.6% → 2023년 75.6%)

지방이전재원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65.8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이 기준전망에 비해 낮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낮게 전망된다. 다만,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19.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에 비해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3) 재량지출

중기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16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중기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이 낮은 이유는 기준전망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을 반영하였으나, 중기재정전망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 기조 변화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표 4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p)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재량지출	349.8	297.3	307.9	316.7	323.6	337.0	350.3	363.8	377.4	391.6	1.3
(GDP 대비 비율)	(16.1)	(13.1)	(13.0)	(12.9)	(12.6)	(12.7)	(12.7)	(12.7)	(12.8)	(12.8)	
기준전망(B)											
재량지출	349.8	323.0	336.2	348.4	354.9	361.4	367.2	372.6	377.5	390.7	1.2
(GDP 대비 비율)	(16.1)	(14.2)	(14.2)	(14.1)	(13.9)	(13.6)	(13.3)	(13.0)	(12.8)	(12.8)	
차 이(A-B)											합계
재량지출	0.0	-25.7	-28.3	-31.7	-31.3	-24.4	-16.9	-8.8	-0.1	0.9	-166.4
(GDP 대비 비율)	(0.0)	(-1.1)	(-1.2)	(-1.3)	(-1.2)	(-0.9)	(-0.6)	(-0.3)	(-0.0)	(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재량지출은 2022년의 경우 349.8조원(GDP 대비 16.1%)으로 동일하나, 2023년부터 차이가 있다.

중기재정전망의 경우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므로 2023년 297.3조원(GDP 대비 13.1%), 2024년 307.9조원(13.0%), 2025년 316.7조원(12.9%), 2026년 323.6조원(12.6%)이며, 2027년부터는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하여 2031년에 장기수렴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장기수렴 수준은 정부가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최근 2023년도 예산안까지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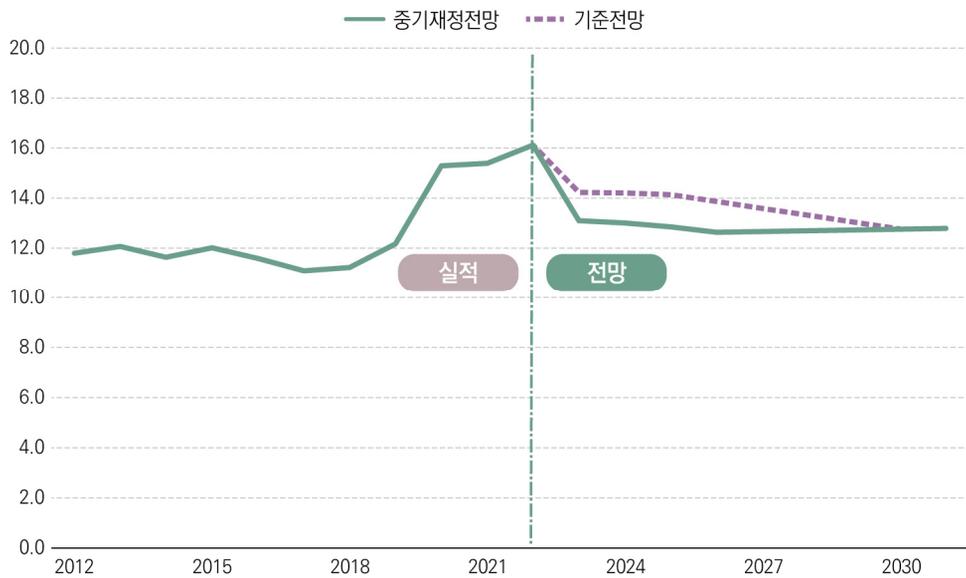
반면, 기준전망은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므로 2023년 323.0조원(GDP 대비 14.2%), 2024년 336.2조원(14.2%), 2025년 348.4조원(14.1%)이며, 2026

년부터는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하여 2030년에 장기수립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장기수립 수준은 2012년부터 2022년(추경)까지의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으로 한다.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 모두 장기적으로 장기수립 수준에 이르도록 가정하므로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는 전망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라. 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재량지출 감축 등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중기재정전망의 통합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102.4조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의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수지 변동이 없으므로 관리재정수지의 개선분은 통합재정수지 개선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에 0.9%p 개선되며, 2024~2029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보다 개선된다. 다만, 전망기간 후반에는 총지출 감소

폭이 총수입 감소 폭보다 작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감소 폭이 감소하는 이유는 재량지출이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 모두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50]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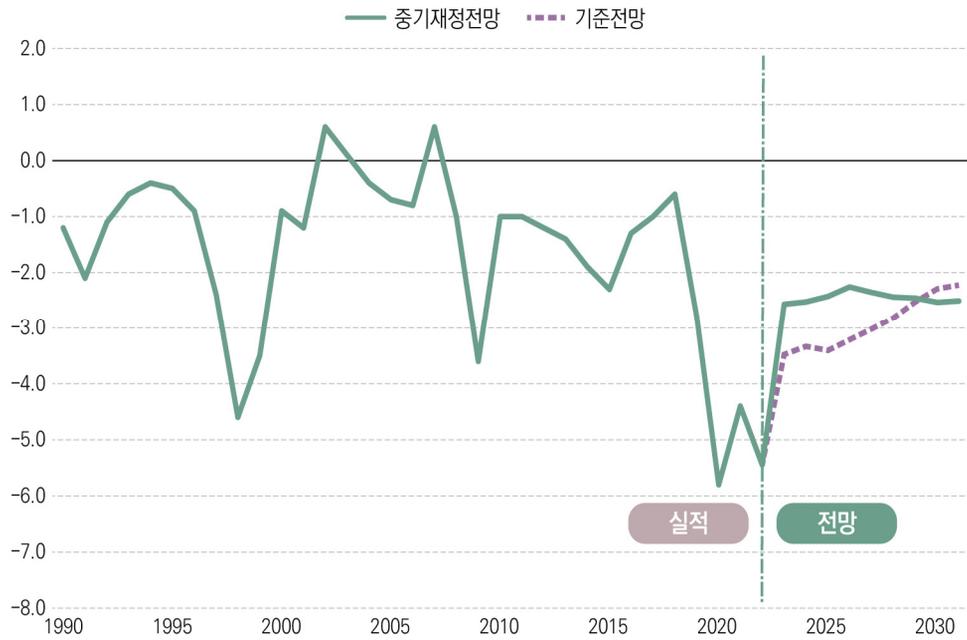
(단위: 조원, %, %p)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통합재정수지	-68.6	-14.0	-17.1	-18.1	-17.9	-24.4	-29.9	-35.5	-43.8	-50.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5	44.2	42.8	41.7	39.9	38.2	37.5	34.7	31.2	26.8	
관리재정수지	-118.1	-58.2	-59.8	-59.8	-57.8	-62.6	-67.3	-70.3	-75.0	-76.8	
(GDP 대비 비율)	(-5.4)	(-2.6)	(-2.5)	(-2.4)	(-2.3)	(-2.4)	(-2.4)	(-2.5)	(-2.5)	(-2.5)	
기준전망(B)											
통합재정수지	-68.6	-34.7	-36.1	-42.2	-42.3	-42.2	-40.2	-37.5	-36.6	-41.3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5	44.2	42.8	41.7	39.9	38.2	37.5	34.7	31.2	26.8	
관리재정수지	-118.1	-78.9	-78.9	-83.9	-82.3	-80.4	-77.7	-72.2	-67.8	-68.1	
(GDP 대비 비율)	(-5.4)	(-3.5)	(-3.3)	(-3.4)	(-3.2)	(-3.0)	(-2.8)	(-2.5)	(-2.3)	(-2.2)	
차 이(A-B)											합계
통합재정수지	0.0	20.7	19.0	24.1	24.4	17.8	10.3	2.0	-7.2	-8.7	102.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리재정수지	0.0	20.7	19.0	24.1	24.4	17.8	10.3	2.0	-7.2	-8.7	102.4
(GDP 대비 비율)	(0.0)	(0.9)	(0.8)	(1.0)	(1.0)	(0.7)	(0.4)	(0.1)	(-0.2)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5]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마. 국가채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재량지출 감축 등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간 9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1년 기준 58.5%로 기준전망(61.7%)에 비해 3.2%p 하락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제외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기준전망과 중기재정전망을 동일하게 가정하므로 차이가 없다.

[표 51]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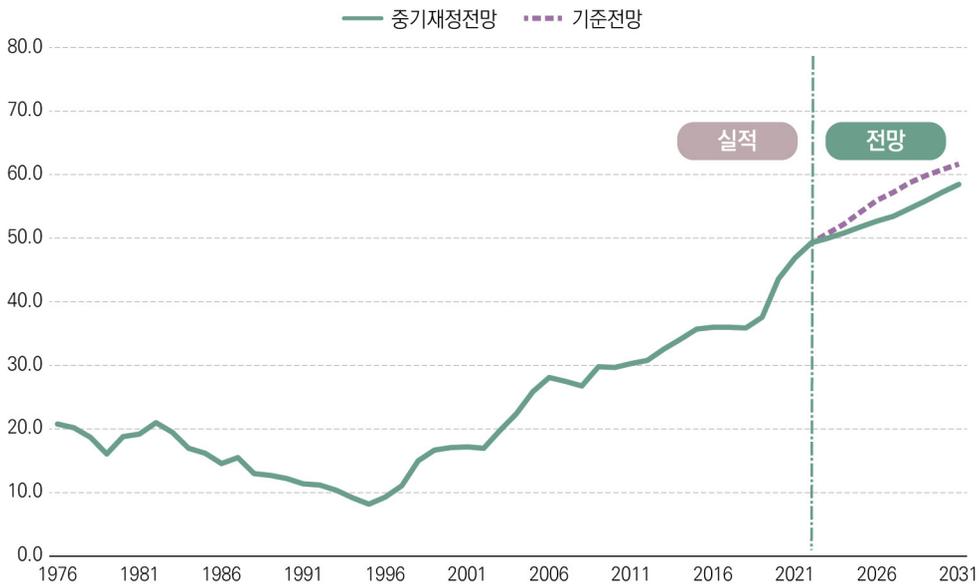
(단위: 조원, %, %p)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국가채무	1,068.8	1,134.8	1,202.4	1,275.5	1,348.8	1,420.9	1,507.7	1,597.6	1,692.3	1,789.6	5.9
(GDP 대비 비율)	(49.3)	(50.0)	(50.8)	(51.8)	(52.7)	(53.4)	(54.7)	(55.9)	(57.2)	(58.5)	
중앙정부채무	1,037.7	1,102.2	1,170.7	1,245.2	1,320.8	1,391.8	1,477.6	1,566.4	1,660.0	1,756.2	6.0
적자성 채무	647.1	688.9	738.0	789.8	843.1	895.5	962.9	1,033.2	1,108.3	1,185.1	7.0
금융성 채무	390.6	413.3	432.7	455.4	477.7	496.3	514.7	533.1	551.8	571.0	4.3
지방정부 순채무	31.1	32.6	31.7	30.3	28.0	29.1	30.1	31.2	32.3	33.4	0.8
기준전망(B)											
국가채무	1,068.8	1,151.1	1,236.0	1,333.0	1,431.9	1,521.8	1,618.9	1,710.8	1,798.3	1,886.9	6.5
(GDP 대비 비율)	(49.3)	(50.7)	(52.2)	(54.1)	(55.9)	(57.2)	(58.7)	(59.9)	(60.8)	(61.7)	
중앙정부채무	1,037.7	1,118.5	1,204.4	1,302.7	1,403.9	1,492.7	1,588.8	1,679.6	1,766.0	1,853.5	6.7
적자성 채무	647.1	705.2	771.6	847.4	926.2	996.4	1,074.1	1,146.4	1,214.3	1,282.4	7.9
금융성 채무	390.6	413.3	432.7	455.4	477.7	496.3	514.7	533.1	551.8	571.0	4.3
지방정부 순채무	31.1	32.6	31.7	30.3	28.0	29.1	30.1	31.2	32.3	33.4	0.8
차 이(A-B)											
국가채무	0.0	-16.3	-33.6	-57.5	-83.1	-100.9	-111.2	-113.2	-106.0	-97.3	
(GDP 대비 비율)	(0.0)	(-0.7)	(-1.4)	(-2.3)	(-3.2)	(-3.8)	(-4.0)	(-4.0)	(-3.6)	(-3.2)	
중앙정부채무	0.0	-16.3	-33.6	-57.5	-83.1	-100.9	-111.2	-113.2	-106.0	-97.3	
적자성 채무	0.0	-16.3	-33.6	-57.5	-83.1	-100.9	-111.2	-113.2	-106.0	-97.3	
금융성 채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정부 순채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6]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은 2022년 추경 기준 609.1조원에서 2026년 715.2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고, 총지출은 같은 기간 679.5조원에서 728.6조원으로 연평균 1.8%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2022년 총지출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71.8조원 증가하여 그 수준이 높고, 2023년 이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수준이 낮게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수지는 개선되는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추경 기준 110.8조원 적자에서 2026년 56.6조원 적자로 개선된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에 52.2%로 증가한다.

[표 5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2		2023 예산안	2024 계획	2025 계획	2026 계획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수입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6.6	4.1
총지출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4.6	1.8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14.0	-13.7	-13.4		
(GDP 대비 비율)	(-2.5)	(-3.3)	(-0.6)	(-0.6)	(-0.6)	(-0.5)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58.6	-57.4	-56.6		
(GDP 대비 비율)	(-4.4)	(-5.1)	(-2.6)	(-2.5)	(-2.3)	(-2.2)		
국가채무	1,064.4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6.0	5.9
(GDP 대비 비율)	(50.0)	(49.7)	(49.8)	(50.6)	(51.4)	(52.2)		
경상GDP 성장률		5.2	4.5	4.2	4.2	4.0		

주: GDP 대비 비율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 기준임(2022년의 경우 본예산(추경) 확정 시 전망치, 2023년 이후는 예산안 제출 시점의 전망치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9.

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1) 거시경제변수 차이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의무지출 관련 제도변화, 재량지출 감축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지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변수와 전망모형 등이 정부와 달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NABO와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된 경상GDP 성장률은 2022년 5.2%에서 2023년 4.5%, 2024년 4.2%, 2025년 4.2%, 2026년 4.0% 수준이다. 반면, NABO가 전망에 적용한 경상GDP 성장률은 2022년의 경우 4.7%로 정부보다 0.5%p 낮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0.1%p 높고, 2025년 이후는 0.1%p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상GDP 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전망치뿐 아니라 재정총량의 GDP 대비 비율도 차이가 발생한다.

[표 5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단위: %, %p)

	2022	2023	2024	2025	2026
중기재정전망(A)	4.7	4.6	4.3	4.1	3.9
국가재정운용계획(B)	5.2	4.5	4.2	4.2	4.0
차이(A-B)	-0.5	0.1	0.1	-0.1	-0.1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총량 차이

총량 수준에서 NABO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총수입의 경우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1.0조원 낮으며, 총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9.9조원 낮은 수준이다. 총수입 차이가 총지출 차이보다 크므로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2.3조원 크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기준으로 0.5%p 높다.³⁰⁾

다만, 2022년의 경우는 총수입·총지출 모두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는데, 총수입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이 정부 예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총지출은 2022년 4월에 정산된 지방이전재원(11.2조원)을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³¹⁾

30) 다만, 이러한 차이는 국가채무의 금액 차이뿐 아니라 NABO와 정부의 경상GDP 차이도 포함되어 있다.

31) 전년도 초과세수 등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정산분은 “세출외”로 운영되므로 2022년 예산(추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5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총수입	14.1	-3.4	-8.0	-11.7	-12.0	-21.0
국세수입	-1.8	-1.0	-5.6	-6.8	-6.1	-21.3
국세외수입	15.9	-2.3	-2.5	-4.9	-5.9	0.3
총지출	12.3	-2.5	-5.0	-7.2	-7.6	-9.9
의무지출	12.3	-2.5	-5.0	-7.2	-7.6	-9.9
복지분야	3.4	-0.9	-0.1	-0.5	-0.5	1.3
지방이전재원	8.9	0.0	-1.7	-2.2	-1.7	3.3
이자지출	0.0	-1.5	-3.2	-4.5	-5.4	-14.5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재량지출	0.0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1.8	-0.9	-3.1	-4.4	-4.5	-11.1
(GDP 대비 비율)	(0.1)	(-0.0)	(-0.1)	(-0.2)	(-0.2)	
관리재정수지	-7.3	-0.1	-1.3	-2.4	-1.3	-12.3
(GDP 대비 비율)	(-0.4)	(-0.0)	(-0.1)	(-0.1)	(-0.1)	
국가채무	0.0	0.0	1.2	3.6	4.9	
(GDP 대비 비율)	(0.2)	(0.2)	(0.2)	(0.3)	(0.5)	

주: 1. GDP 대비 비율은 중기재정전망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 기준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2022. 6. 16.) 기준임

2.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항목별로 차이를 보면, 국세수입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연도별로 1.0~6.8조원 낮으며, 2022~2026년 동안 총 21.3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전망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 중기재정전망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2023~2026년 세수효과는 △56.4조원으로 정부 전망(△47.2조원)보다 세수감소 규모를 9.2조원 크게 전망하였다. 세수효과 전망 차이의 이유는 개별 세법개정 항목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NABO가 정부보다 최신의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세수효과 추계 시 최근 감면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 차이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NABO는 향후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2년 국세수입을 정부보다 1.8조원 낮게 전망하였으며, 경상GDP 성장에 따른 세수부양성³²⁾ 수준도 정부(1.4)보다 낮은 수준(1.3)으로 예상하였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도별로 △5.9~15.9 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2022~2026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총 0.3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는데, 국민연금의 2022년 기금운용수익(기타재산수입)이 최근 수납 실적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20.5조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31.3조원)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국세외수입의 경우도 2022년 수납 실적을 고려할 때 예산에 비해 초과 수납이 예상된다. 그러나 2023년 이후는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NABO의 경상GDP 전망이 정부보다 낮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5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수입

	주요 요인
국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국세수입 전망 차이: 정부 전망 대비 △1.8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전망은 향후 세수전망의 베이스이므로 2023년 이후 전망에도 영향 ○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전망 차이: 정부 전망 대비 △9.2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2026년 간 세수효과 전망: 정부 △47.2조원 vs. NABO △56.4조원 - 차이의 이유: 최근연도 과세자료 및 세수효과 추이 반영 여부 ○ 경상GDP 성장에 따른 세수부양성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6년 간 GDP성장률에 따른 세수부양성: 정부 1.4 vs. NABO 1.3
국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수납 실적을 고려한 전망과 2022년 예산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의 경우 10.9조원 초과 수납 예상 -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입의 경우 3.7조원 초과 수납 예상 ○ (2023년 이후) 경상GDP 전망치 등 차이

재량지출의 경우 2022~2026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과 동일하게 가정하였으므로 총지출의 차이는 의무지출에서 기인한다.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무지출은 연도별로 △7.6~12.3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2022~2026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총 9.9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분야의 경우 2022년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급여지출이 2022년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예산 대비 각각 2.9조원, 0.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2023년 이후는

32) 경상GDP 성장률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의 탄력성으로 계산한다.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는데 이는 주로 사학연금, 산재보험,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³³⁾ 등의 급여지출이 정부 계획보다 낮게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³⁴⁾³⁵⁾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2022년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는데, 이는 정부가 2022년 4월에 정산한 지방이전재원(11.2조원)을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3년 이후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 특성 상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전망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자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는 국고채 이자지출에서 발생한다.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최근 국고채 이자율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3~2026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46.0~60.6조원 수준으로 전망된 것을 고려하여 2022년 15.7조원에서 2026년 21.9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이자지출이 2022년 15.7조원에서 2026년 27.3조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3)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와 동일하게 2023년부터는 0세반, 2024년부터는 1세반 보육료 예산의 일부가 부모급여 예산에 통합될 것으로 전제하였음에도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감소 전망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34)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급여지출은 36.2조원으로 2022년 추경 대비 5.6조원(18.4%) 증가하는데, NABO는 35.1조원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에 따라 2022년에 노령연금은 1960년생(62세)이, 조기노령연금은 1964년생(68세)이 수급을 개시하는 반면, 그 다음 코호트인 1961년생과 1965년생은 2024년(각각 63세, 59세)에 수급을 개시하게 되므로 2023년에는 신규로 수급을 개시하는 코호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2년 대비 2023년의 증가율이 예산안처럼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35) 기초연금의 경우 국고보조율과 감액수급자에 대한 전망 방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NABO는 국고보조율의 경우 2023년 예산안의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액유형(국민연금, 부부, 소득)별로 최근 5년(2017~2021년)의 감액수급자 수와 감액연금액 실적 자료의 평균을 이용하여 유형별로 전망하여 합산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고보조율의 경우 2019~2021년의 평균 비율을 이용하고 감액수급자와 연금액은 2019~2021년 평균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표 5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의무지출

	주요 요인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분야) 2022년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급여지출이 예산 대비 증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이후는 급여별 수급자 수 전망 등 전망모형의 차이 ○ (지방이전재원) 2022년의 경우 2022년 4월에 정산한 지방이전재원(11.2조 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이후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전망 차이 ○ (이자지출) 적자국채 발행 규모 및 국고채금리 등 거시경제변수 차이

다. 재정준칙의 준수가능성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2026년 동안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2.6\sim\Delta 2.2\%$ 수준을 유지하며, 2026년 국가채무 비율은 52.2%로 계획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은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재정준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준칙(fiscal rule)은 “수치로 명시하여 법제화한 재정운용 목표”를 말하는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총량에 수치 제한을 두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지속적인 제약이 발생한다.³⁶⁾ 정부는 이번 예산안 제출에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2022. 6. 16.),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2022. 7. 7.) 등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Delta 3\%$ 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동 한도를 $\Delta 2\%$ 로 축소하는 것이다.

NABO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보면, 정부의 계획과 유사한 국가재정의 흐름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으로 2022~2031년 동안 총수입이 총 130.3조원 감소하지만, 총지출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이전재원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축소 등으로 총 23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2031년 동안 $\Delta 3\%$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⁷⁾

36) IMF(2022),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MF.

37) 이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기준전망)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2027년 동안 $\Delta 3.0\%$ 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
(단위: GDP 대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중기재정전망										
관리재정수지 비율	-5.4	-2.6	-2.5	-2.4	-2.3	-2.4	-2.4	-2.5	-2.5	-2.5
국가채무 비율	49.3	50.0	50.8	51.8	52.7	53.4	54.7	55.9	57.2	58.5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재정수지 비율	-5.1	-2.6	-2.5	-2.3	-2.2					
국가채무 비율	49.7	49.8	50.6	51.4	52.2					

주: GDP 대비 비율은 중기재정전망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 기준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2022. 6. 16.) 기준임(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2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추경(2회) 기준으로 49.7%이나 최근 정부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49.0%로 추정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낮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정부의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변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의 재량지출 통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재량지출은 297.3조원으로 2022년 본예산(304.4조원) 대비 2.4%, 추경(349.8조원) 대비 15.0% 축소된 규모이며, 2024년 이후로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3.6%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과 실적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정부 계획의 신뢰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12년부터인데, 2012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커 이번 재량지출 감축 계획이 단순히 정부가 표방한 정책의지만으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³⁸⁾

38) 다만, 2016년 이후의 계획은 계획 기간 후반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적이 계획보다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8]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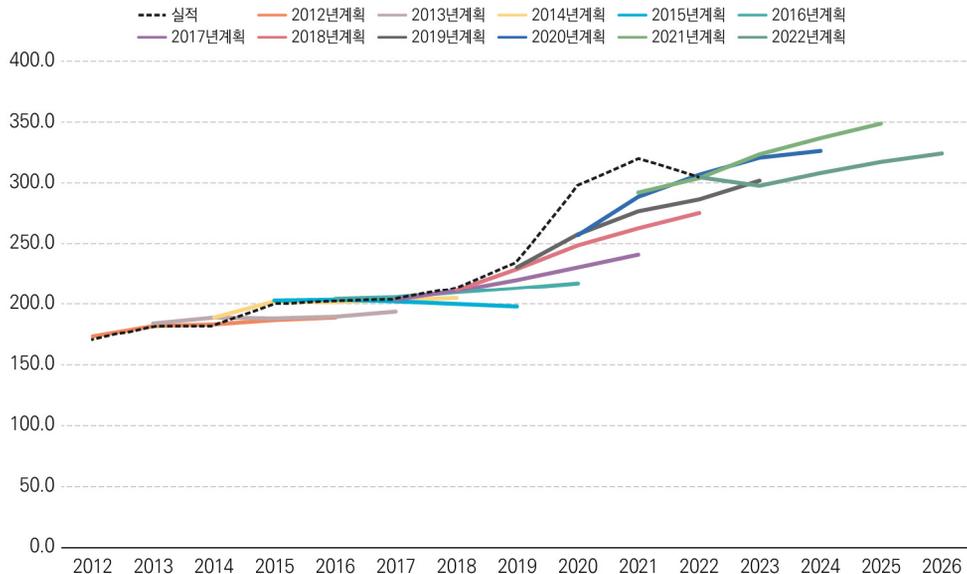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량지출 실적	170.0	181.2	181.9	199.3	201.9	203.6	213.1	234.4	296.8	319.0
2012년 계획	173.5	181.9	183.3	186.4	188.6					
2013년 계획		183.6	188.9	187.6	189.6	193.5				
2014년 계획			188.6	202.0	201.4	203.3	204.3			
2015년 계획				202.8	203.3	201.8	199.7	197.3		
2016년 계획					203.8	205.1	209.5	213.3	216.8	
2017년 계획						203.5	211.0	220.0	230.2	240.9
2018년 계획							211.9	228.8	248.3	262.3
2019년 계획								230.3	257.8	276.1
2020년 계획									256.6	288.5
2021년 계획										291.9

주: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 해는 본예산 기준이며, 두 번째 해는 예산안임
 2. 음영 부분은 계획보다 실적이 높았던 연도를 의미함(첫 해는 제외함)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각연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7]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단위: 조원)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 해는 본예산 기준이며, 두 번째 해는 예산안임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각연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보면, SOC 분야(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의 재량지출 통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총지출의 12개 분야 중 주요 분야의 2022년(본예산)부터 2026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Delta 2.6\%$, SOC 분야 $\Delta 1.8\%$ 등이다. 그러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는 2022년 지출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 지원 사업이 감소('22년 3,383억원 \rightarrow '26년 13억원)함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SOC 분야 역시 전체 재량지출과 마찬가지로 실적과 계획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동 분야의 지출 계획도 실현가능성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향후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재량지출 감축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 상의 기준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속력 있는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2022 본예산	2023 예산안	2024 계획	2025 계획	2026 계획	연평균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238.6	254.4	269.5	5.5
2. 교육	84.2	96.1	100.3	101.7	105.9	5.9
3. 문화·체육·관광	9.1	8.5	8.7	8.9	9.1	$\Delta 0.1$
4. 환경	11.9	12.4	12.9	13.3	13.5	3.2
5. R&D	29.8	30.7	32.0	33.2	34.4	3.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26.6	27.4	28.1	$\Delta 2.6$
7. SOC	28.0	25.1	25.5	25.8	26.0	$\Delta 1.8$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24.5	24.7	24.9	1.3
9. 국방	54.6	57.1	59.5	61.8	63.8	4.0
10. 외교·통일	6.0	6.4	6.7	7.0	7.2	4.7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23.8	24.7	25.6	3.5
12.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20.3	126.5	132.2	7.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9.

[표 60] SOC 분야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SOC 분야 실적	23.2	23.2	22.4	25.4	23.0	21.9	18.9	20.6	23.0	26.2
2012년 계획	23.1	23.9	23.0	22.7	22.7					
2013년 계획		24.3	23.3	22.0	20.5	19.2				
2014년 계획			23.7	24.4	22.4	20.7	19.1			
2015년 계획				24.8	23.3	21.1	19.7	18.7		
2016년 계획					23.7	21.8	20.3	19.3	18.5	
2017년 계획						22.1	17.7	17.0	16.5	16.2
2018년 계획							19.0	18.5	18.0	17.7
2019년 계획								19.8	22.3	23.4
2020년 계획									23.2	26.0
2021년 계획										26.5

주: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 해는 본예산 기준이며, 두 번째 해는 예산안임

2. 음영 부분은 계획보다 실적이 높았던 연도를 의미함(첫 해는 제외함)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각연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둘째, 정부의 국세외수입 증가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외수입은 2022년(추경) 212.4조원에서 2026년 255.3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을 제외할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4.5%인데, 수납 실적 추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표 61]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세외수입	210.2	212.4	225.5	237.0	246.4	255.3	5.0	4.7
사회보장성기금	104.8	104.8	114.6	118.7	122.6	127.0	4.9	4.9
기타	105.4	107.6	110.8	118.3	123.8	128.3	5.0	4.5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외수입 중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입의 추이를 보면, 2017~2021년 동안 연평균 5.1%, 2012~2021년 동안 연평균 3.3%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9.6%로 높았는데, 이는 2021년에만 수입이 크게 증가한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⁹⁾ 2021년을 제외할 경우 2016~2020년 기간의 국세외수입(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제외)의 연평균 증가율은 2.8% 수준이며, 10년(2011~2020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2.5%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유재산 매각 확대나 전기요금 인상(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수입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국세외수입의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출 측면에서 재량지출을 통제하는 것만큼 수입 측면에서도 국세외수입의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정부의 계획만큼 수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62] 국세외수입(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제외) 추이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적	73.5	75.5	85.2	82.1	82.1	82.5	82.5	84.5	86.9	92.0	100.8
(전년 대비)	(6.8)	(2.7)	(12.9)	(-3.6)	(-0.1)	(0.6)	(-0.1)	(2.4)	(2.9)	(5.8)	(9.6)
연평균 증가율											5.1
											3.3
											2.8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9) 2021년의 결산 상 특이사항으로는 한국은행 잉여금(기획재정부, 2020년 대비 2021년 1.4조원 증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출연금 반환 수입(금융위원회, 1.3조원 증가), 통신사업자의 주파수할당대가 수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조원 증가), 복권판매 수입(기획재정부, 0.5조원 증가),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수입(문화체육관광부, 0.5조원 증가) 등이 있다.

IV. 요약 및 결론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기간의 재정총량을 전망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인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57.6조원(GDP 대비 28.0%)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07.6조원(GDP 대비 29.7%)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Delta 3.2\%$, 2023년 $\Delta 0.6\%$, 2031년 $\Delta 1.6\%$ 로 전망되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Delta 5.4\%$, 2023년 $\Delta 2.6\%$, 2031년 $\Delta 2.5\%$ 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재량지출을 감축한 재정기조 변화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 등으로 총수입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130.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총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232.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량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16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102.4조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채무는 기준전망에 비해 9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1년 기준으로 58.5%로 기준전망(61.7%)에 비해 3.2%p 개선된다.

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일정한 전제 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및 그 기조가 유지될 경우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재정적 결과를 추계(projection)하는 작업인데, 이번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통해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

조 전환”이라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은 준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Delta 3\%$ (국가채무 비율 60% 초과 시 $\Delta 2\%$ 로 축소)로 하는 것인데, 중기 재정전망 결과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3~2031년 동안 $\Delta 2.6\sim\Delta 2.3\%$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ABO 중기재정전망의 총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낮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정부의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변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의 재량지출 통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재량지출은 297.3조원으로 2022년 본예산(304.4조원) 대비 2.4%, 추경(349.8조원) 대비 15.0% 축소된 규모이다. 그리고 2024년 이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3.6%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과 실적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정부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불확실성이 크므로 보다 실효적인 재량지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국세외수입 증가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을 제외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세외수입(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연평균 증가율은 4.5%이나,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한 재정운용 기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세외수입 확보 노력도 충실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BN 979-11-6799-104-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1678-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